



주소 증명원  
출 소

처리기간  
즉 시

출 소	성 명	윤 이 연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동작구				
수 행 사 항	칭호번호	8 0		죄 명	포고령 위반
	형 명	징역	6 월	감 형	빈 칸
	형 기	금 고	빈 칸	작 감	빈 칸
	구속일자 입소	1980.12.24.	형 확정일	1981. 2.11.	직 방
형 종 료 일	1981. 2.10.	출 소	1981. 2.13.	사유	집행할 형 무
구금통산 170 일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위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 년 6 월 10 일

신 청 인 윤 이 연 시 명  
손도장, 인장  
주민등록번호

성 동 구 치 소 장 귀 하

구비서류 : 없음	용 도	관계 : 본인	수 수 료
			없 음
증명자			김도균 (인)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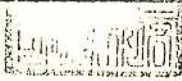
1994 년 6 월 10 일

성 동 구 치 소 장

No 1490



제 소					처리기간	
중 명 원					주 시	
(출 소)						
제 출 소 자	칭 호 번호	운 여 권		주 권 등 록 번 호		
	주 소	서울시 구치				
수 형 사 항	칭 호 번호	4025	죄 명	집사비위반		
	형 명	징역	8월	감 형	불감	
	형 기	급 고	중간	삭 감	불감	
	구속일자	86.11.6	형 화 정 일	불감	석 방	(2) 기간
형 기 종 료 일	불감	출 소	87.2.19	사 유	출소	
<p>민원사무처리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위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84년 6월 10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u>                    </u>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등록번호 <u>                    </u></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구치소장 귀하</p>						
구비서류: 없음					수 수 료	
					없 음	
<p>위 사실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84년 6월 10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구치소장 <u>                    </u></p>						





# 현 정권의 윤여연 민청련 사무국장에 대한 불법연행 구속을 규탄한다.

최근 건국대 시위학생들을 살인적으로 진압 내기 구속하는 등 사상유례없는 공포정치가 극에 다다른 폭정 속에서 민주인사에 대한 체포와 검거가 끊이지 않고 있다.

85년 9월 김근태 진의장 구속에서 시작된 대대적인 민청련 탄압으로 수배되었던 윤여연 사무국장이 지난 3일 오후 10시 방배동 피신처에서 남부경찰서 형사들에게 주변 50여명이 지키보는 가운데 폭력적으로 강제 연행당하였다.

또한 경찰은 강제연행 후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물쇠가 채워진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 온 방안을 뒤지는 작태가 저질러졌다.

우리는 이번 윤여연 사무국장에 대한 불법적 연행과 수색이 법을 수호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금의 공포적 정치상황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지금 윤여연 사무국장은 민주인사들의 고문수사로 악명높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기속의 민회도 차단당한 채 불법 감금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는 1년여의 피신생활로 쇠약해진 윤여연 사무국장에 대하여 작년 김근태 의장에게 저질러졌던 협박과 고문이 또다시 저질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워버릴 수 없다.

이번 윤여연 사무국장의 불법연행은 그간 현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줄기차게 계속되어 온 민청련 파괴공작의 일환이며 나아가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미증유의 탄압 속에서 장기재집권을 획책하는 현 정권의 악랄한 음모의 일부임을 명백히 적시한다.

그러나 민청련에 대한 현 정권의 탄압이 아무리 극심한지라도 우리의 민주화를 향한 진군은 결코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며 군사독재정권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과 장기재집권 획책음모는 결국 스스로 자기들의 무덤을 파는 짓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 민청련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윤여연 사무국장 이외에도 2명의 의장과 수 많은 간부 회원들이 감옥속에 들어가 있으나 민주화투쟁을 통해 저들의 손에서 우리의 동지를 구출하고 민족민주운동의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민중과 함께 굳건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 우 리 의 주 장

1. 윤여연 사무국장에 대한 불법감금 수사를 중단하고 즉각 석방하라.
2. 민청련 간부들을 비롯한 민주인사 학생·노동자 2,500여명을 즉각 석방하라.
3. 현 군사독재정권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공할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4. 현 군사독재정권은 장기재집권 음모를 중단하고 즉각 퇴진하라.

1986. 11. 5.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서울형사지방법원

19 87 2 17 판결선고  
19 87 2 17 원본영수

~~판 결~~

사 건 86 고단 83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윤

여

련

(尹汝連)

)무직

1955. 1. 2. 생

1987.2.25.  
확 정 항소기간경과  
서울지방법원형사1부  
검찰주사이준덕

주거

서울

본적

전남

검 사 안 왕 전

변 호 인 변호사 박 성 민

주 문 피고인을 판시제1. 의 죄와 판시제2. 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 8

월에 처한다.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00일을 피고인에 대한 위 판시제1.의 죄

에 대한 형에 신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씩 피고인에 대한 위 판시 제1.

86-2249/



제2.의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4.3.경 송전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후, 1976.1.

경 군입대로 유학하고 1979.9.경 군제대를 한 다음 복학하여

1980.4.경 동교 학생회장으로 피선된 후 학내외에서 게임철매 반정부 시위를 주

동하고, 1980.7.30. 경 김대중등 내란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동교에서 제적되

고, 1981.2.3.경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게임포고령 위반(내란죄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동년 2.13.경 만기출소한 후, 1985.

6.5.경 민주화청년연합회(이하 민청련이라 약칭)의장 김근테의 권유로 민청련에

가입하여 사업부장,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여 오던중 1985.6.13. 서울형사지방법

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불온유인물 제작 반포)으로 구류 7일의 형을 선고받고

그무렵 위 즉결심판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평소 현정부는 마.일 재국주의에

속된 군사독재 정권으로서,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지식인등 민중을 억압 착취하고

있으므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려면 민중을 조직화하여 집약된 힘으로 조직적

인 투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오던 차에,

1. 1985.6.6. 08: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세종문화회관뒤 광장에서 민청련 지도위원 예춘호, 동 성내운을 비롯하여 민청련 의장 김근태, 부의장 최민화, 총무부장 천영초, 대변인 김희상, 사무국장 박우섭, 운영위원장 김희택, 피고인등 민청련 간부 및 회원등 약 40여명이 광주민중항쟁 희생자 묘소를 참배할 목적으로 전세낸 관광버스를 타고 출발, 같은날 14:00경 전남 광주시 망월동 소재 광주사태 희생자 묘역에 도착한 뒤 ~~광주사태~~에 모인 희생자 유가족등 30여명과 함께 김희택의 사회로 "광주항쟁 5주기 희생자 추도식"을 거행하면서

- 분향제배

- 위 유가족을 대표한 전계량이 "우리는 이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딛고 민주화 운동을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여 싸울 것이다"라는 요지의 인사말을 하고

- 김근태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돌아가신 영령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투쟁할 것이다"라는 요지의 추모사를 하고

- 최민화가 "군화와 총칼에 짓밟혀 참혹하게 가신 영령들이여, 지하에서 일어나 산자와 함께 아픔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며 못다푼 한을 푸소서"라는 요



지의 추모사를 하고

- 피고인등 참석자 전원이 "5월의 노래"를 합창하여 묘역을 순례하는 등으로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2. 동년 8.10. 17:00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신촌교회에서, 위 한경남 김희택, 박우섭, 천영초, 최민화, 김종복, 안성수, 피고인등 민청련 회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민청련 제5차 총회"에서 김희택의 사회로

- 민주 열사에 대한 묵념

- 위 김종복의 제4차 총회 이후의 4.19 행사와 5월 광주 민주항쟁기념사업 등에 대한 사업보고

- 의장 한경남은 특별위원회로 학원안정법 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에 최민화를 임명한후

3차  
3-1차

- 운영위원장 박우섭이 "민중생활 개선에 주력하여 대중 운동을 지원하고 민족 자주문제를 제기하며,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현 군사독재 정권의 타도를 요구한다. 역사는 민중 민족과 함께 하는 편이 것이며, 민주화 운동은 이 시

대를 책임있게 사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최대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현  
군사 독재정권은 국민과 민주화 운동 세력을 이간시키고 민주화 운동세력에  
대한 실질적 탄압을 전개하여 정기 집권을 획책하는 간교한 술책을 부리고  
있다.

우리들은 국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대변하여 모든 민주화 운동세력의  
힘을 결집하여 지혜롭고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는 민청련 제5차  
총회에 즈음한 시국선언문을 낭독한 후, 이어서 "현정권은 퇴진하라"  
"구속인사 석방하라", "노동 3권 보장하라", "농산물 가격 보장하라", "대  
체없는 철거 중단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자, 피고인등 참석자 전원이  
이에 후창하고,

집행국장 서원기는 "현정권은 허약한 권력유착을 위해 미.일등의 외세에 의  
해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예속을 스스로 강화하여 왔다. 현정권은 한층  
도 인되는 몇몇 정치군부와 독점재벌 및 외세의 지독권을 결사적으로 방어하  
기 위하여 언젠라도 제2. 제 3의 광주희살을 자행할 준비가 되어있다. 모든



민주화 운동세력은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더욱 강하게 부쟁

하자. 라는 요지의 제5차 총회 결의문을 낭독하자. 피고인등 참석자 전원이

박수로 이를 채택하고

최민화가 "학생 탄압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현 정권의 발상은 광  
주민중의 민주화 요구를 무자비한 학살로 갈아 뭉개는 것과 다를바 없다.

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어서 "광주학살 책임지고 현정권은 물러

가라", "망국적 학원안정법 제정음모 중단하라", "모든 구속학생과

민주인사를 즉각 석방하라"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등 참석자 전원이

제창하여

각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주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1, 2, 3, 4, 5회)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1, 2회)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김성수가 작성한 검사작성의 김희택에 대한 피의

가사자

자 신문조서(1, 3회)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치안본부 제3조정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수사자료카드와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김성수가 작성한 즉결심판서 사본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제14조 제1항(징역형선택) 가-12.)

형법 제37조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중한 판시

제2.의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7조, 제62조 제1항(범행이나 그 내용등 사안이 비교적 경미)

1987.

2.

17.

판사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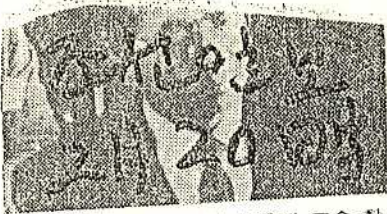
연

목









○중남 온양에서 열린 서울대 교수 학회와 회사문제등을 중점 논의했다.

民靑聯 사무국장 執猶  
光州사태 추도 시위  
서울형사지법 鄭然漢판사는  
19일 85년 6월 광주시태 5주  
기추도모임에서 시위를 주도해  
구속기소된 민靑聯사무국장 尹  
汝進(32) 피고인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인정  
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西工大主 1명 구속

民靑聯 사무국장 執猶 2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4단독 鄭然漢  
판사는 19일 집시법위반 혐의  
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구  
형받았던 민靑聯사무국장 尹  
汝進피고인(32)에게 징역 8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民靑聯 사무국장 구속

치안본부는 6일 민청련 사  
무국장 尹汝進씨(31)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尹씨는 지난해 6월 6일 광  
주 민청련행 회상지묘역에서 법  
원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  
고 있다.

# 拷問신고센터

# 가혹행위 6件 확인

# 2件은 本人이 문제화 不願 4件 검찰에 공정수사 촉구

## 1년간 12件 접수

朴鍾哲은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법원(호사1호)의  
집시법위반에 설치된 「불법  
행위 및 고문신고센터」에 지  
난 1년 동안 신고된 사건은

모두 12건으로 이중 변호사  
회 조사위원들의 조사결과 수  
사기관의 불법행위나 고문  
등 기록행위 사실이 확인된 사  
건이 6건인 것으로 22일 박  
씨는 서울지방법원호사하는 불법

사실이 확인된 6건의 사건  
중 4건에 대해서는 검찰  
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  
고 2건은 본인 및 가족들의  
요청으로 고소 또는 고발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접수  
된 나머지 6건의 사건 중 현  
재 2건은 조사중, 1건은 조  
사결과 가혹행위 사실이 인정  
되지 않았으며 3건은 신고사  
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다  
고 밝혔다.

고문신고센터에서 수사가  
관의 불법사실을 확인 검찰  
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촉구한  
4건의 사건은 다음과 같다.

△경찰청에 의한 용의자 폭  
행(11사) 서울지방법원(호사1호)에  
대정위(10) 金聖東(37) 朴汝泰  
차레 裴仁忠 등 가혹행위를  
지난해 11월 8일(高문) 14  
일 3년 등 미성년자 2명  
을 강도강간혐의로 파출소  
에 연행 高문(高문) 구두발로  
검이치고 고문으로 무릎 등  
정장이 북송이 때 부분물 수심  
차레 裴仁忠 등 가혹행위를  
질관들에게 구두발로 뒤머리

가했으나 高문(高문) 무릎으로  
플러났다.  
법호사하는 이들 3명의 관  
련정관들을 집시법위반혐의  
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형사지법 1심판이  
산 경찰관 수명(高문) 지난해 5  
월 28일 절도현행범으로 연행  
한 金仁忠씨(서울廣津구 孔德  
동)를 경찰서 지하실에 데려  
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두들  
기며 강요 구속했으나 金  
씨는 검찰호사후 무혐의로  
6월 12일 석방했다.

△북사 金海성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6시경 서울鐵  
路구連池동 기독교회관에 들  
어가려다 경비중이던 사복경  
복행위 가혹행위 사실이 인정  
된다 고 밝혔다.

△피도관 韓(집시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청련 사무  
국장 尹汝進씨(32)는 86년 11  
월 14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되  
면서부터 피도관들에게 집단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그 뒤 정신이상세를 일으키  
게 87년 2월 집행유예로 석  
방돼 한양대부속병원에서 치  
료를 받았다. 조사위원 姜勳  
勳 변호사는 「피도관 구치소  
의 수사수장들을 면담한 결과  
폭행 등 가혹행위 사실이 인정  
된다 고 밝혔다.



는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당시 朴虎泳·辛伯鉉·朴海善씨 등 3명을 범인으로 구속 기소했던 金鍾寶 검사는 1월 말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金씨는 지난 2월 10일 朴虎泳씨를 만나 사죄도 했다고 한다.

金貞心양은 지난 1월 14일 강원도 춘천의 한 여관에서 임검에 걸려 구속됐다. 朴씨 등은 지난 86년 4월 金양 등 12명을 위증죄로 대구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金貞心양 등 두 명에 대해 기소 중지, 나머지 10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었는데 검찰이 기소중지하면서 金양에 대해선 수배령을 내려왔던 것이다.

대구지검으로 송치된 金양은 당시 경주지청에서 받았던 혹독한 고문에 대해 모두 털어 놓았다. 金양은 '83년 2월 13일 검찰에 처음 불려간 이래 8월 1심 법정외의 2차 중언신문이 끝날때까지 수시로 검찰에 불려가 며칠씩 잠 안 자우기, 심한 매질 등 가혹한 고문을 당해 정신신이 아닌 상태 속에서 위증을 했다'고 털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들은 '고문에 의해 위증을

한 金양을 위증죄로 기소할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당시 金양이 받은 고문은 金양으로 하여금 범거범은 몸으로 검찰청에서 도망가게 했을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 金양도 가장 심한 이 사건 피해자 중의 한명인 것이다. 金양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3년 6개월 동안 고향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어렵게 살아왔다고 대구지검에서 말했다고 한다. 金양의 고향엔 金양의 부모가 유복하게 살고 있다.

### 朴씨 경찰복귀가 남의 문제

대구지검 金基錫 차장 검사와 諸葛隆 佑 특수부장은 2월 10일 朴虎泳·辛伯鉉·朴海善씨 등을 만나, 金양을 처벌할 수 없으니 위증죄 고소취하장을 써주면 석방시키겠다고 말했다. 朴씨 등은 흔쾌히 취하장을 써줬다. 金·諸葛 검사는 이 자리에서 朴씨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순해대상 청구소송에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또 당시 직접 고문을 했던 검찰직원 10명 중 경주지청 서기 이모·서모·신모

씨 등으로부터는 사표를 받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金·諸葛 검사는 朴씨들에게 '하루 빨리 상처를 씻고 사회에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검찰이 도와주겠다'는 말도 했다는 것이다.

金貞心양은 2월 11일 대구지검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석방돼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다. 朴虎泳씨는 사건이 났던 지난 83년 2월 검찰의 강요로 16년간 봉직하던 경찰에서 의원 면직됐었다. 검찰 당국이 朴씨 등에 대해 적극적인 사후처리를 강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경찰에서 도망치려 하던 朴씨에 대한 복직을 적극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

마음마다
자연사랑
손길마다
자연보호
아의생활의 종합지
月刊 山
朝鮮日報社 發行 定價 300원

### 추적취재

# 「拷問人脈」의 뿌리

2222.84.(87.3)

독립투사를 고문한 손으로 해방 뒤에는 민주투사들을 고문한 일제 고등계 경찰들의 변신과 과정 추적

### 원칙만 나무였던 「근면자 처벌」

고문과 권력은 철저한 합수관계에 있다. 고문은 고문을 해도 뒷탈이 없다는 수사관의 확신이 있었음으로써만 존재한다.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권보장에 코웃음치는 권력은 고문을 정당화 논리를 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잔극 조장한다.

그러나 「고문자 처벌(必滅)」이라는 원칙이 있고, 그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실천이 병행된다면 고문 이설 자라란 없다. 그것은 공권력을

권자만이 할 수 있다. 권력을 든든한 배경으로 한 수사기관의 힘이 시민의 그것보다 강하면 고문이 성하고, 시민의 인권이 수사기관의 권한보다 더 존중되는 사회라면 고문은 발붙이지 못한다. 그래서 고문은 권력의 성격과 지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제로섬게임이다. 불운한 것은, 우리에게 는 원칙만 세워지 실천에 옮긴 정권은 없었다는 점이다.

서울대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으로 내무장관이 경질된지 며칠 지난 1월 23일 신임 鄭鎬溶장관은 내무부기자실에 들러 「아직도 일제시대의 고문잔재

### 金和柱

조선일보 원간조선부 기자

가 남아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내무부는 국회 내 무위에 제출한 朴군 고문치사사건 경위서에서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적법 수사의 확실한 이행 ▲수사요원 관리규정의 제정 ▲수사요원의 수사활동에 대한 통제 강화 ▲인권보장을 위한 상설 기구의 설치, 운용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鄭장관의 「부끄러운 일」이라는 언급이나 내무부의 「가혹행위 방지책」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민주의 탄압을 받던 일제 시대는 덮어두고라도, 미군정시기와 정부수립이후의 상당한 기간 동안에도 내





이 사회에 현존하는 고문이 일제의 전제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왜 해방 뒤에도 고문을 절멸하지 못했으며, 고문을 전수해 준 사람을 누구인가하는 데 있다. 사진은 1945년 10월 21일 군정경찰 창설식에 참석한 경찰수뇌의 미군정 부장고문관으로, 왼쪽부터 張澤相수도청장, H-에릭슨, 趙炳五경무부장. 일제고등경찰출신자들은 이들에 의해 해방국가의 경찰을 장악할 수 있었다.

무당국의 「고문근절방침」은 실제로 줄기 차게 천명되어 왔기 때문이다.

### 매년 한포털 「구미키리엔」 발표

1945년부터 1961년의 5.16까지 관계 장관이상이 기자회견 또는 담화문의 형식으로 「고문경찰 임벌」의 방침을 발표한 것은 거의 20회(신문에 제문으로 보도된 경우)에 이른다. 국민들은 거의 매년 한번씩 고문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받은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당했다고 고소고발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았고 또 여론화됐다. 20회에 가까운 약속은 그런 의미에서 고문을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의 단호함을 나타내준다고 보다는, 그때 그때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여론수습용이었다고 해석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당시의 수사풍토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몇가지의 지시·회견 내용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1948년 3월 군정총장 金炳魯(사법 부장은 관하(管下:서울시경·각 도경)에 내린 경고를 통해 「최근 각 지청보고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사건 취조에 있어

문의 증거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엄밀히 조사해서 범죄자를 징치하려는 것이니 고문당한 자는 두려워 말고 공개 증명한 지 소상히 알려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절대로 신분을 보호해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음에도 3년 뒤인 52년 5월 張澤相(국무총리)는 또 기자들로부터 고문수사의 악폐를 근본색원할 대책을 질문받아야 했다.

「고문수사라는 것은 극히 중요할 망국적 악습인 바 군정시대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정부가 수립된 데서부터 1, 2년 여 동안에 매우 심하게 행해진 것으로 안다. 만일에 고문을 하는 일이 발각되기만 하면 엄중한 처벌을 할 방침에 변동이 있을 리 없지만 워낙 일부 수사관들 중에는 수준이 낮은 자들이 있어서 아무리 엄중 지시를 하여도 간혹 악습이 있는 일은 통탄할 일이다.」(방첩대에서 간혹 그런 일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바 앞으로 적절한 방침에 의하여 고문수사의 악폐를 인소한 생각이다」

그로부터 5년 뒤인 57년 4월 徐廷學

치안국장은 「적절한 방침을 또 발표한다. 그는 고문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범인 수사에 있어 경찰이 고문한 것이 밝혀질 때에는 관계 경찰관은 물론 당해 서장까지도 입건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徐國장은 「이미 일반 인은 아직도 과거와 같이 경찰이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나 절대로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며 만약 있다면 단호한 처단을 하겠다」고 말하고 일반도 여사한 사실을 알았을 시에는 지체없이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덧붙혔다. 도대체 고문은 방침이 적절치 못해서 빈발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 수준 낮은 수사관들이 있기 때문인가.

### ·日帝 경찰의 생리-재빠른 번신

실상 일신 수사관들이 상부의 지시를 어겨가면서까지 목·달아날 각오를 하고 고문을 행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경찰계통은 늘랍도록 강인한 응집력을 지니고 있는 법이다. 수사관들은 고문을 써서라도 사건을 해결하면 공로상을 달 지언정, 고문했다고 해

과도히 폭력을 행하여 치사의 불상사를 야기하는 예가 적지 않은 바 이러한 행동은 인도상 관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권의 보장과 명량한 분위기의 보장이 고려되고 있는 정세에 비추어 고문의 근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금후 여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 한층 준엄한 처단을 하는 동시에 관계 경찰관에도 특별히 주의를 환기하기를 요망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해 7월 정부수립 이래 최초의 고문치사사건으로 기록되는 이른바 「수도청고문치사사건」이 드러났고 이어 49년에는 육군방첩대에서 高義斗(고문치사사건) 발생, 키다란 물의를 일으킨다. 그해 10월에는 식물학계의 권위자 張亨斗(교수의 변사사건)을 둘러싸고 또 한차례 전국이 떠들썩해지자 李承晩 대통령이 각부장관에 특별지시를 내리게 이르른다.

「특고일인(持高日人)들이 한인들을 압박해서 북송시키려 할 적에 악형을 범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다.」(실로 왜족의 악독한 습관을 받아 가지고는 상등 국가에 이르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는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이다.」(누구나 고



서 뒷사람으로부터 처벌받지는 않는다  
는 것을 보장받고 있다. 1946년 趙  
炳玉경무부장이 처음 「고문정관 엄중징  
벌」을 발표하고 그로부터 11년의 지나  
徐廷學차안본부장이 「고문 단호대처」를  
발할 때까지 수십건의 크고 작은 고문  
사례가 있었음에도 엄벌에 처해진 경관  
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  
는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의 응징력이 강하고 서로 감싸주  
는 연대감이 어느 조직보다 근근한 까  
닭은 일차적으로 경찰 본연의 업무성  
격에 기인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  
유는 일제시대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  
지 경찰이 국민의 편에서 일해왔다  
기보다는 권력의 도구, 권력의 하수인  
으로 역할해 왔기에 따라 국민의 반감을  
샀기 때문이다. 이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환심을 사는 일에 충직했기에, 민  
주과 이상의 다른 정권의 들어설 때  
마다 재빠른 변신으로 새로운 충성의  
길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  
이다.

일제시대 조선인 경찰관 특히 고등계  
형사출신들은 민족주의자와 독립투사를  
때려잡는 일을 하다가 해방뒤에도 잡

시 총독부의 우산 밑에 모여 있었고, 미  
군정시대에는 인사권을 쥐 미군과 한민  
당을 설득, 동료 친일경찰관들을 대거  
포용했으며, 李承晚정권 때는 친일파의  
단죄를 기도하는 반민특위와의 한관승  
부에서 승리, 위협세력이 없는 상황에  
서 독재의 장기화를 위해 일로 매진  
했다. 4.19는 이러한 권력해바라기집  
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였지만 친일경  
찰의 뿌리를 뽑지는 못했다. 그들의 끈  
질긴 생명력은 5.16뒤에도 남아 또다  
른 독재정권의 공고화에 헌신한다. 따  
라서 李承晚의 특별지시나 鄭鎬溶 장관  
의 언급이 아니다라도, 이땅에 일제부  
력통치의 잔재인 고문이 존속하고 있음  
은 차라리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피해자들 「국민망망」 그리고 소

일제의 경찰·헌병들이 어느 정도 고  
문수사를 보편화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서는 당시의 신문 스크랩이 거의 유일  
한 자료다. 아직까지는 일제의 수사행  
태에 관한 국내의 연구 논문이나 저술  
이 나와 있지 않은 까닭도 있지만, 중  
언을 해 출만 한 이들이 해방 40년여가

호르는 동안 대부분 죽었기 때문이다.  
생존하고 있는 고등경찰 출신도 있으  
나, 이들은 고문에 관한 얘기라면 아예  
만나주지를 않거나 언급하기를 꺼려  
했다.

1920년 창간부터 1940년 폐  
간될 때까지 조선·동아 양대 일간지에  
보도된 고문사례는 출잡아 1백50여건  
에 이른다. 그러나 이 통계는 「고문」이  
란 낱말의 제목으로 들어간 사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극히 피상  
적이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19  
20년은 일제가 3·1운동에 자극을  
받아 무단통치를 이른바 문화정치로 바  
꾸면서 헌병경찰제도를 폐지, 보통경찰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따  
라서 헌병경찰제도가 시행되던 190  
6년부터 1919년 사이의 억압적 고  
문수사행태는 그 이후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결코 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신문에 보도된 사건만으로 수사실태  
를 추론한다는 것이 많은 무리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신문자료는 몇가지 주목할 만한  
시사를 던져 준다. 오늘날의 상황과 비

교해 그 유사성을 찾아보는 것도 의의  
가 있다.

우선 이 기간동안 보도된 고문사례  
1백50여건 가운데 고문치사, 또는 고  
문치사로 보도된 옥중사(경찰감사결과  
병사로 발표된 사례도 포함), 취조받고  
나와서의 병사등은 모두 90여건으로 전  
체사건의 60%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당시의 고문의 일마나 극악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고문  
치사는 물론이고 큰 신체의 손상없이  
풀려난 경우라도 고문을 받았으면 경관  
을 고소한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  
이다. 법정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  
려지기도 했으나 검찰은 상당부분 고문  
정관을 기소했다. 대표적인 고문 및 고  
문고소 사례 몇가지를 들이 본다(판호  
안은 연도·원).

법정에서 「국민망망」

「13세의 유녀를 절도혐의로 파출소에  
서 고문」(20·5), 「부모는 고소 준비, 서  
(署)에서는 사실조사」(20·6) 「경찰서에  
걸어 둔 육포를 잃어버린 경찰관의 金  
彰鎬씨 일가를 혐의자로 몰아 그중 1

명유 고문치사케 한 데 대한 보성實  
城서 피소 사건(21·9), 사실이면 엄중  
처벌, 경무국에서도 보성서장의 고소당  
한 사건 경위조사중(21·9), 살인·불법  
감금등의 보성서 독적사건 판결, 서장  
등 네명은 무죄라 하고 순사 다섯명만  
유죄판결, 원고 피고 공히 불복 항소할  
듯(21·11) 「자기집 버를 팔아먹은 일로  
구속된 정주(定州) 5대독자 金龍守의  
고문 형사 사건, 친족 60명 경부당국에  
진정」(25·4) 「인천서에서 모사건의 혐  
의자를 취조한 후 그 여식(13세)을 나  
체로 고문하였다 한다. 문화정치가 실  
시됨에 따라 태형과 고문을 금지하  
였다. 그러나 폭행과 고문은 비밀비재  
하다. 우리는 법률전문으로 책임자를  
을 게 아니라 말로서 여론에 소(訴)코  
자 한다(25·4) 「무죄된 피의자 고문순  
사를 고소, 공명한 허물과 잡아다 고문  
한 순사, 검사기소로 곧 공판(25·10) 「  
최조반다 발광, 무장단체에 발해준 혐  
의로 정주(定州)에서 혹독한 고문받고  
미쳐버렸다(25·11) 「임산부를 인치하  
고 혹독한 나체고문 전신에 열여섯 곳  
이나 대소 상처, 흥해(興海) 주재소 순  
사 2명, 피해자 검사국과 경찰 두곳에

고소해(26·5) 「고문으로 치사, 절도  
피의자를 매로 두들겨 사망케한 강언일  
랑(岡彦一郎)과 金一龍 순사 공판 개정  
(27·1), 岡彦은 4년, 金은 2년 인도  
(27·2) 「양구(楊口)서 고문치사케 한  
순사에 3년형 인도(27·4) 「고문에 못  
이겨 없는 사실 자백(29·6), 경찰이 만  
든 방화범 법정에서 필경무죄」 「평양  
(平壤)서 金月仙 사건, 여자에 차마 못  
할 고문했다고 5년 판결(29·9) 「피의  
자를 취조중에 고문, 치사케 한 소야  
(小野)순사 징역 2년(31·8) 「순사 3  
명이 합력 용의자를 고문치사, 광주에  
서 공판, 호남 송정리경찰관 주재소 사  
법계주임 일촌수임(一村秀一)과 관공형  
(管谷亨) 朴泳喆 세순사가 愼仲善을 고  
문치사(32·1) 「

고문을 당했다고 고소하고, 검찰은  
사실이 입증되면 경찰을 구속 기소하  
고, 법원은 실형을 내리고... 한일합성  
金根祖이사 고문치사사건처럼 피의자가  
죽지 않는 이상 고문경찰이 법정에서  
는 경우를 거의 볼 수 없었던 우리나라  
의 인권실태와 비교가 되는 장면들  
이다.  
고문을 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악하게 될 터이었다.

고문방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구타폭행이다. 상해임시정부에서 청년활동부를 하다가 1936년 모포로 들어오던 중 체포된 金宇鎰(83·춘천거주·광복회 회원)은 목포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6개월간 고문을 당했다. 그가 받은 고문은 구타와 물고문, 바늘고문, 비행기 고문이었다. 물고문은 사자를 묶어 책상위에 놓고 일렬로 수건을 좌우로 돌돌박고 발톱을 찌르는 것이고, 비행기고문은 뒷걸박을 지워 책상위에 올려 놓고 포승을 천장고리에 건 다음 책상을 빼버린다. 그러면 뒷걸박이 된 채 공중에서 떠 있게 되는데, 이를 '학춤' 추게 한다'고도 한다. 金씨는 50년의 지난 지금까지도 겨울만 되면 비행기고문의 후유증으로 사지가 쭈신다고 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별장계, 단판, 인두로 생식기를 지지기, 성고문, 전기고문, 음탕에 불심지를 막는 고문등의 행해졌다. 전기고문은 심하게 받으면 정중(精中)이

상부의 해결, 독촉이라고 한다. 일선형사나 수사관들이 사건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릴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제 시대에도 이러한 사정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1934년 4월 13일 조선일보가 "사상범 취조방식과 검찰당국의 딜레마"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상부의 검거독려가 고문사건을 빈발케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이 사상관계 피의자들을 취조할 때에 고문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해차사죄 등의 독죄사건으로 검찰당국의 적발된 건수가 지난 한해동안 함경남도에서만도 일백 건이라고 한다. 이는 경찰의 상부에서 경찰의 위신을 확보하여 조그만 일에 거리까지 말고 검



\*EPA: 알레르기 환자를 돕는 농도를 최정수준으로 낮추어 주는 불포화 지방산 함유량의 도파를 방지하므로 성인병을 예방해 줍니다.

즐거운 다이어트식 - **등원참치** **가래**  
자매품: 양반김/오대감구이

거짓속을 나타내라고 함부로 격려하고 있는 때문이다. 체일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경찰은 너무 공명심에 타올라 피의자를 고문 취조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럴 때마다 검찰당국의 감찰이 심하면 소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경찰측에서 반발하여 분규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모든 고문고소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1930년 9월 26일자 조선일보가 "조선에서 경찰고문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얼마 전 일본에서는 고문고소사건이 있어 검사국까지 중요시하고 있는데 조선에서는 모두 증거 불충분이라 기각한다. 조선과 일본의 일사동언(一視同仁)이라는데, 이런데에서는 통하지 않

던가'라고 비난, 검찰이 고문경찰에 대해 자주 불기소처분을 내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후신들은 전기고문**

일본 경찰의 직급은 현 정부관급에 해당하는 도(道) 경찰부장, 경시(警視) (경부) (경정) (경부보) (경감) (순사) (순사) (2·3인)으로, 한국인과 일본인 또는 일본인들끼리 담당했다. 한국인들에게만 맡기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다. 한국인과 일본이 고문을 맡으면 대개 한국인이 직접 손을 댔다고 한다. 이 고문 집행자 중 상당수가 해방뒤의 경찰에 그대로 남아 고문 교관으로 활

추는다고 한다. 전하련 전노린사건으로 지난 81년에 구속, 기소되어 무기부역 중인 李泰護씨도 한때 병원에서 「무정란」으로 판정받았다가 한약으로 정상화를 되찾았다고 한다(李씨의 어머니 이정숙씨)。

**전력과 맴돌이 야합**

내무부 치안국의 1972년에 발간한 「한국경찰사」가 「국립경찰의 특징」이라든가 「향토에서」 「국립경찰기에 이르기까지 민주적 개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일제들의 공공연히 자행했던 고문행위 폐지시킨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한국경찰사는 고문폐지에 대한 문서상의 증거인 「경찰외의 의한 문서상 전」을 소개하면서, 이 문서가 1948년 6월 4일 趙炳玉경무부장과 H. 에릭슨부장고문관의 공동명의로 예하 각 정부중앙 관구청장(도청국장) 관구청보에게 발송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 국립경찰의 각 관구 공안창고의 체계적 집으로나 간접으로나 하기 향부의 협의가 있는 경찰관부나 하급경찰관에게 정식시킬 권한을 부여함 가.급급 후

취급종의 유치인이나 피조사인을 고문 혹은 구타하는 것, 나. 유치인이나 피조사인을 고문 혹은 구타함의 정보를 은닉하는 것(…) 3. 경찰관행은 전부 제거하여 하며 이에 관한 지방신문 보도를 전기(振起)함」

그러나 고문폐지의 문서는 단지 문서 조각에 불과했다. 일제의 주구노릇을 한 조선인 고문경찰의 해방뒤에도 경찰수뇌부의 그대도 들이 있을 수 있었던 현실에서, 고문의 하루 아침에 절멸될 리 만무했다.

전정영한 민주독립부가라면 동족을 탄압한 자들에 응분의 징벌을 가하고 새로운 경찰상을 세웠어야 했지만, 국민의 지지 기반이 약한 독재정권은 자기에게 충성을 바치는 친일 경찰을 버릴 수가 없었다. 경찰은 경찰과 위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김반의 유일한 생존반안임을 알고 있었기에 수많은 사건 조작, 李承晚의 현답했다. 이러한 권력과 물리력의 야합속에서 「고문 문화」가 그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 식탁

## 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것?

—향긋한 게살맛이 일품인 오양맛살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인기가 대단한 오양맛살은 맛살의 재맛을 즐기시는 분께 더할나위없이 좋은 제품입니다.



### 오양맛살

—수산식품의 힘으로—



● 본 사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71 78-3  
732-6500-9  
● 판매부 : (서울 718-6785-71 부산) 242-8010

### 수보단위는 日警출신이 득점

일제의 패망은 당면하여 친일경찰에 대한 보복을 낳았다. 조선총독부 종정(終政)의 기록(日名酒喜男 지음)에 따르면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일제경찰에 대한 폭행 헐뜯음의 사건은 1백77건에 달했다. 조선인 경찰에 대한 보복 행위는 1백11건으로, 일인경찰에 대한 보복 건수보다 훨씬 많았다. 민중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던 말단 경찰들이 주 대상이었다. 조선인정관·말단정관들에 보복이 집중되었다는 것은 일제통치의 간교함과 조선인 경찰의 약행을 짐작케 하는 자료다.

민중의 보복을 피해 달아났던 친일 경찰들은 미군의 진주와 태를 같이 해 원대부귀한다. 9월 6일 맥아더사령부는 38선 이남의 군정을 실시한다는 포고와 함께 종래의 행정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선포했다. 미군당국은 경찰 권을 총독부로부터 인계받고도 친일경찰을 제거하기는 커녕 이들을 중용함으로써 경찰이 민중의 원성 속에서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미군은 경찰 재편작업을 벌이면서도 골수 고등경찰인 崔燕(일제 경시 출신)과 경기도경찰부장 오카(岡久雄)에게 인사의 권한을 맡기다시피한 것이다.

있는 崔燕이 어떤 인물일 기용했는지 인지는 자명한 일이었다. 그는 인사권을 전 경기도경찰서 경무과장자리에 앉 아 있으면서 이후 친일경찰 출신자들의 대부분 역할을 했다. 군정경찰이 얼마나 많은 일제경찰신으로 구성되었는지는 당시의 통계가 잘 말해주고 있다. 경기도 경찰부의 경우 해방당시에는 조선인만 1천2백93명이었는데 일경이 완전히 물러난 뒤인 10월경에는 4천8백19명으로 늘었다. 숫자상으로만 보면 3천5백여명의 새로 들어와 비(非)일제출신이 대다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 다 말단이었고, 간부진은 일제출신자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순사들이라면 지긋지긋해했던 게였 그제였다. 경찰제복만 입었다하면 주위에서 못매를 가하던 시절이었다. 그런 시점에서 참신한 인물들이 경찰제복에 지원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과분했다. 경찰내부에서 일제경찰의 전통이 근절될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9월 16일 최초의 경관선발시험이 있었고 10월 21일 부민관에서 경무과 창설식이 거행됐다. 관직경험자는 무조건 합격이고 이름 석자 쓸 줄 아는 정도면 대충 채용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경찰이 었다.

이에 앞서 일인경찰들이 물러간 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친직 경관들은 무조건 일제급씩 진급시키는 조치가 있었다. 구악이 청산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높은 직위에 오르면서 해방된 나라는 경찰사가 시작된 것이다. 해방 당시 일제경찰에 몸담았던 간부급으로 정시이상 올랐다가 국립경찰에까지 남아 있던 사람들로 화인이 가능한 인물 들은 다음과 같다.

- ▲尹宇鼎·황해도 송화(松禾)시장해 방위 치안국장
- ▲李益興·평북 박천시장해방위 내무

### 장관

▲田鳳德·경기도 보안과장·해방뒤 육 군헌병사령관

▲孫錫慶·서울 성동시장·해방뒤 중부 서장

▲崔燕·경기도 형사과장·해방뒤 수도 청고문

▲盧慶連·평남 보안과장·해방뒤 수도 청 수사과장·헌병 중령·의임

▲崔慶進·평남 경시·총독부 학무국 사무관으로 친직·해방뒤 수도청 차장

▲盧周鳳·전남 경시·군정때 전남 경찰부장

▲魯璣柱·경남 수송보안과장·공안과 장

그의 비간부급으로 고등계 형사들 지 낸 사람들 해방 이후에도 계속 경찰에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崔秉世·서울 종로서 고등경찰 근무
- 해방 뒤 수도청 사찰과장·서울사경부 국장
- ▲費根鉉·서울 서대문서 고등경찰·해 방 뒤 경기도 인천서장
- ▲洪宅輝·평안도 고등경찰 경무부·해 방 뒤 수도청 사찰과 부과장

### 「전신」의 뿌리

친일경찰들이 존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한국전쟁의 기원」을 쓴 미국의 한국 전문가 브루스 커밍스는 「군정 당국의 좌익에 대항할 만한 다른 세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친일 경찰관들은 친일파를 추방, 처벌하려는 어떤 세력도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해야만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충실한 기능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런 이해관계로 해서 남북한에 있던 한국인 경찰 8천명 가운데 5천명이 미군정 경무부에 의해

▲李夏成·서울 동대문 경무부·해방 뒤 경기도청 사찰과장

▲洪炳熙·평안도 경찰부·해방 뒤 치 안국 수사지도과장·경남 도청국장

▲李九範·서울 종로 서대문서 고등경찰·해방 뒤 서울시경무과장·강원도청국 장

▲朴士一·평북 고등경찰·해방 뒤 경기도청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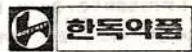
▲崔蘭洙·서울 고등경찰 경무부·해방 뒤 서울시경무과장



# 소화에 자신을 드립니다 웨스탈 포르테



소화촉진, 가스제거, 이담작용  
**웨스탈 포르테정**  
표준소제가격: 100장, 10,000원



재임용되었으며 이들이 경찰의 해산을 이루었다. 특히 미군정의 경험자 우대 방침에 따라 정사급 이상의 간부가운데 80%가 일제경찰의 경험자로 채워져 있었다.

배운게 재주라고 체질화된 고문을 떨쳐 버리지 못한 고등계출신 경찰이 해방되어 최초로 만들어낸 작품은 이른바 수도청고문치사사건이었다. 사건의 경위는 대충 다음과 같다. 경찰은 1948년 1월24일 張澤相 수도청장 피습사건을 발표,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수도청 중부서에서는 범인 林和(당시 24세)를 취조하면서 곧바로 마구 구타하고 물고문(인명) '잠수함' '신문보도'를 3시간 동안 계속한

끝에 사망케 했다. 고문지휘자는 수도청수사과장 盧德述과 수도청 전사찰과장 崔雲霞, 하수인은 사찰과 부과장 朴士一, 수사과 부과장 金在坤, 金留夏 白大鳳 등이었다. 모두가 일제경찰 출신이었다. 당황한 盧德述은 1월27일 朴士一을 시켜 林이 도주한 것처럼 위장하고 朴과 金在坤을 시켜 시체를 한강 다리 밑 얼음 속에 묻어버리게 했다.

영원히 묻혀졌을 뻔한 사건이 그 배임을 벗겨낸 것은 수도청에 근무하던 趙奎燾이란 경관이 1월 말 경우우부의 趙炳契 수사과장을 찾아가 경위를 털어놓은 데서 비롯됐다. 趙炳契는 盧德述과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중에 있던 崔雲霞를 신문, 자백을 받아내기에 이

수합'이라는 불고문으로, 박정철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상황을 연상케 한다. 자민투관계로 86년 검거되어 치안본부 대공본실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李萬준(서울대 83년 입학)의 증언을 들으면 왜 '잠수함'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수장이 간다. 추군에 따르면 3명이 한조가 되어 들은 양팔을 붙잡고 한 명은 발을 잡아 거꾸로 세워서는 육조에 집어넣는다. 육조물은 물론 담배꽂초가 등등 떠다닐 정도로 더럽다. 2분 가량 담뱃가 번쩍 들어올리고는 숨을 쉬려고 입을 벌린 순간 재빨리 다시 쳐박는다. 그러면 대개는 물을 먹게 되고, 이런 과정을 서너번 반복하다 보면 아예 포기하고 물을 먹기 시작한다. 마치 잠수했다 부상하는 잠수함의 모습이다. 물고문의 뿌리가 어디서 연유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盧德述은 수도청고문치사사건으로 경무부 수사과에 구속 수감되어 있다가 金泰日 부청장의 비호하에 도주하기도 했으며, 또 반민투위에 수배되어 있을 때 도내무부장관 尹致暎과 외무장관 張澤相의 집을 버젓이 출입하기도 했다. 일제폭력통치의 하수인으로 30년

가까이 사상관계사건을 취급해 일본정부로부터 훈7등 중7위를 받은 盧德述. 반민투위에 체포될 당시 盧는 4명의 호위경관과 6정의 권총, 현금 34만 1천원이란 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친일경찰·고문경찰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그가 그런 호사와 권력층의 비호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니다. 기소장에 나와 있는 그의 죄적을 살펴보자.

盧德述은 울산태생으로 울산보통학교 2년을 중퇴하고 일인이 경영하는 잡화상 고용인을 거쳐 경남 경찰부 보안과 근무 순사로 경찰에 첫발을 내디뎠다. 1924년 12월 정부보로 승진. 의령 김해 거창등의 사법주임을 역임한 뒤 1934년 평남보안과장까지 올랐다. 동래서 사법주임으로 있을 때 그는 독립운동단체인 혁조회(革新會)사건을 취급, 회장 金圭鎭 부회장 兪鎭興을 고문하여 옥사케 했다. 통영서 사법주임재직 시인 1932년 5월경에는 반일단체인 M.L단원 金在學을 메이데이(노동절)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검거, 두손을 뒤로 두발을 앞으로 걸박하여 천정에 매달아 구타하고 고문을 가했다

는 것이다.

### 「귀머위하다」는 뜻이 바로 죽었다.

여순(麗順)반란사건 이후 숙군작업을 전개한 육군본부 정보국 방첩과는 전문 수사요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경찰관을 대거 뽑아들었다. 수도청 사찰과 형사들과 일제 헌병출신자들이 특채됐다. 두번째 고문치사사건은 반민투위에 쫓긴 일제출신들의 도피처, 방첩대에서 벌이지게 된다.

高義斗는 서울 종로구 원남동 동회장이며 민보단(民保團) 좌익 전향자 모인(동대문구 단장이었고 시법보호위원회장)이자 동대문경찰서 후원회장이란 직함을 갖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중류 이상의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은 물론 고위층 인사들과도 친숙한 관계였다. 그러던 그가 1949년 9월 방첩대(SIS·육군본부부대의 전신) 대장 金鼎龍에게 빨갱이란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연행. 하룻만에 사망한 것이다. 이 사건은 高義斗라는 유명인사가 체포되었다는 것만으로 큰 화제를 모았지만 취조 도중 번사했다는 데서 방첩대에



# 逸品요리

—향긋한 게살맛이 일품인 오양맛살—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언제 어디서나 인기가 대단한 오양맛살은 맛살의 제맛을 즐기시는 분께 더할나위없이 좋은 제품입니다.



## 오양맛살

—수산식품의 원조—



● 본 사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76-3  
732-6500-9  
● 판매부 : (서울) 718-6785-71 부산 242-8010

보내는 의혹의 눈길은 더욱 커져갔다.

高義斗의 변사사건이 알려지자 그렇 치 않아도 방첩대를 못마땅해 하고 있던 각계에서는 고문치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金昌龍은 방첩대로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 高義斗가 고문을 받아 사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려 했으나 세간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太倫基변호사의 '권력과 재판'에 따르면 金昌龍은 비밀수기에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고문치사가 아니다. 그는 원래 몸이 튼튼했으며 혈압이 높은 사람이다. 9월 27일 오전 8시 그를 동행했을 때 그는 어느 누구보다 당황해했으며 필필 뒤면서 발악을 했다. ∴ 그는 자기의 죄상을

한다.

수도청고문치사사건을 시발로 한 일 제 수사방식의 악폐는 오늘날 고 박종철 군에 이르기까지 실로 간단없이 이어져 왔다.

자신들의 죄과를 누우치기는 커녕 권력에 빌붙어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인사들을 탄압한 일제출신자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인권 풍토를 삭막하게 만든 장본인들이다. 그런 점에서 반민특위는 일경과 그들의 숙달된 고문기술을 절멸시킬 수 있는 절대적 기회였다. 그러나 친일경찰들의 반민특위 주동자 암살을 모사사실 습격등 필사적인 와해공작과 李承晩의 친일경찰비호, 현저한 물리력의 열세로 인해 반민특위는 역사적 의미만을 남긴 채 주저앉고 말았다. 48년 9월 22일 발표되어 이듬해 8월 31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반민특위가 한 일이라곤 불과 7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 뿐이다. 그나마 이들도 재심청구로 감형되거나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반민특위는 오히려 반민특위의 앞장섰던 사람들이 친일경찰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기막힌 상황을 연출해냈을 따름이었다.

을 하는 수없이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숨가쁜 소리를 내면서 몹시 괴로와하다가 다음날 저녁 7시, 취조 도중의 자에서 쓰러지면서 절명한 것이다.

의사들을 불러 응급치료를 가했으나 소생하지 못했다. 그는 자기의 죄상이 보통이 아님이 드러남에 따라 괴로와했으며(…) 심장마비로 죽은 것이다. 시체를 해부한 서울대학의 金모교수는 5백여명의 시체를 해부한 권위자로서 그는 금성심장마비로 진단을 내렸던 것이다.

이같은 金昌龍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국방부장관의 특청에 의해 검찰청으로 넘어 갔다. 서울지검의 두 검사 의 입회하에 부검이 행해지고, 고문치

49년 6월 6일 40명의 부하를 이끌고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한 중부서장 尹箕炳(81·해방당시 수원시 사법주임치안국 정보과장·시경국장 역임)은 그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음인지 별 감회가 없는 듯했다. 그는 처음에는 「일반인이 지지하지 않지 않았느냐」며 말꼬리를 흐리다가 나중에 張際根내무차관(인제관사출신)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 「애국지사 체포 안 해본 사람입니다」

반민특위 습격사건에 대한 경찰의 태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작전지휘자 金泰善시경국장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국립경찰창간 45회」 19974).

「경찰의 요직인 시경 사찰과장 崔雲霞와 중로경찰서 사찰주임 趙應善을 구속한 반민특위의 처사는 전 경찰을 격분케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특위측의 해명은 이들이 일제출신으로서 애국지사를 체포하는 등 반민특위 행위를 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일제 때 애국지사를 체포했던 일은 일제출신치고 누구나 한

사로 판명됨에 따라 高義斗를 취조한 일제출신 鄒普熙 2등상사는 구속됐다. 鄒상사는 중앙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되어 10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징역 3년형을 받아 복역중 9개월 뒤 6·25를 만나 출감한다. 鄒씨가 풀려난 점에 대해서도 형집행정지처분인가, 형의 면제인가 하는 법정책의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는 계속 특무대에서 복무하다가 3대국회의원선거때 경북 성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금배지를 달기도 했다.

서울 방배동에 거주하는 鄒普熙씨는 지금도 高義斗가 틀림없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면서 자기가 실형을 받은 것은 당시 여분에 밀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변칙은 겪은 일이었기 때문에 구태여 崔과장등 2명만을 문제삼아 구속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분이 서지 않는 처사였다. 특위의 처사는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金若水등 3명의 특위위원이 구속된 데 대한 보복행위라는 것은 문지 않아도 변한 일이었다. 나는 반민특위 사무실을 기습할 것을 지시했다. 이러한 동안 치안국 철도경찰대 사찰과 직원 일동은 「시경에서 반민특위대를 포위, 수색 검거한 것은 파사형정(破邪顯正)의 수호신인 경찰관으로 의당 취해야 할 행동이었으며 우리는 이번 시경의 처사를 전폭 지지한다」는 요지의 격문을 시경에 보내오기도 했다.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을 파사형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의식, 생사의 위기에 처해 단결 대처하는 일제출신들의 두려운 동료의식에서 이들의 전도된 가치관·역사의식과 경찰체통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4·19는 반민특위에 이어 친일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였으나 새정권은 그럴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고문의 뿌리가 너무 깊어 파고든 뒤이기도 했다.



# 우리 문제는 우리 손으로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

- 정신적, 육체적 구타 및 가혹행위, 격리 등 고문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

후유증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것은 모든 고문 피해자들의 공통된 절규입니다. 기관원, 전경, 군인들만 보아도 죄지은 것 없이 가슴 졸이며 쫓기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안기부, 기무사, 정보사, 검찰, 경찰, 파출소, 교도소 소리만 들어도 진저리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 죽음만이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에 하루에도 몇번씩 죽음을 생각하였고 인간의 무기력과 공권력의 잔인함에 전율하면서 고문을 당해본 고문피해 당사자들의 절규입니다.

정상적 생활인이라면 일생을 살면서 몇번쯤이나 죽음을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러기에 한번이라도 고문을 당해본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외치거나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반란, 내란 주동자, 희대의 살인마, 사기꾼, 절도범, 강도범인 전두환, 노태우는 칙사대접을 하며 조사하면서 든없고 힘없고 백없는 우리에게 왜그리 가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분명했던 시절의 양반이 쌍놈들을 울궤내던 수단으로서의 고문이었는지, 순사만 보면 젖먹이도 울음을 그친다던 시절의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민중들을 탄압하여 저항을 잠재우려는 수단으로서의 고문이었는지, 아니면 친일파와 그 후손들에 의해 장악당해온 공권력이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자들과 민중들을 죽쇄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고문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안기부, 기무사, 정보사, 검찰청, 경찰서, 유치장, 파출소, 교도소, 그리고 전경버스안에서까지 구타와 가혹행위를 동반한 공포분위기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미국대통령이 온다고, 미국기관이 피해를 입었다고 예비검속, 무차별 구금되어 직장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장준하 선생, 최중길 교수의 의문의 죽음을 비롯한 수많은 의문사, 삼청교육을 비롯한 수많은 반인륜적 가혹행위로 후유증을 앓다 많은 사람이 죽어 갔으며 현재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거나 잠재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으며 고문후유증을 앓던 장현구군이 분신 자살했습니다. 따라서 고문피해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인 것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개인간의 사소한 폭력사건에 있어서도 사과는 물론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하고 배상을 해 주는 것이 관례인데 하물며 공권력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고문피해 문제에 대해서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에 우리 고문 피해자들은 전국고문피해자모임을 결성하고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손으로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보상을 위한 반민특위 구성과 폭압기구 해체등 인적, 제도적, 구조적 잔재청산과 불균등청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가고자 합니다. 많은 고문피해 당사자들의 적극적 실천 및 서명운동 동참과 기금 모금에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 전국 고문 피해자 모임

(연락처 : 015-277-2048    간사 윤여연)

국민은행 031 - 21 - 0601 - 526 ( // )

우체국 010892 - 0063526 ( // )

농협 029 - 02 - 144972 ( // )



또 한 사람의 **고문피해자인 장현구군**이 사회진보를 외치며 죽음을 택했습니다.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일당은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장악해온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제 부분의 특권적 세력과 결탁하여 그에 항거하여 진보적 사회대개혁을 외치며 투쟁하는 민주인사들과 민중들을 그들의 장악하에 있는 안기부, 기무사, 경찰청 등 폭압기구에 강제 불법연행하여 모진고문을 자행하였으며 수많은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끝내는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는 장현구군의 죽음이 이와같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폭압구조의 산물임을 인식하고 그 동안 민주화운동의 각 부분에서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분노의 세월을 살아왔던 우리 고문피해자들은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하는 문민정부에 다음을 요구코자 합니다.

1. 반민중, 반민족, 반민주 행위자 및 기회주의자 처단과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위원회(약칭 '반민특위')를 즉각 구성하라.
1. 폭압기구를 해체하고 고문 명령자, 협력자, 하수인들을 피해자들의 손으로 처단케 하라.
1. 미국은 권력격변기에 있어서 한반도에서 반민주적 응분의 역할을 했음을 자인하고 책임을 지라.
1. 고문피해자들의 진상을 조사하여 고문피해자들에게 응분의 배상을 하라.
1. 사회 제 부분의 인적, 제도적, 구조적 잔재를 청산하고 사회의 불균등 회복을 위해 노력하라.

## 고 문 피 해 자 모 임

연락처: 715-9185, 호출: 015-277-2048(간사: 윤여연)



5. 우리 민주정치연합은 자유로운 통일논의가 보장되는 가운데 남과 북이 상호 존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진보를 위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김영삼정권은 조몬전쟁과 정상회담 등에 대한 태도에 서 보이듯이 여전히 북한을 경계와 대립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고 나아가 이른바 주사파에 대한 정치적, 사상적 탄압에 몰두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군사파쇼하의 압축기를 방불케 하는 이러한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하고, 남과 북, 해외 전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대오각성할 것을 김영삼정권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 민간의 자유로운 통일운동을 보장하고 제5차 범민족대회를 허용하라.
-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이창복 의장과 황인성 집행위원장을 즉시 석방하라.
- 정권안보의 도구이자 냉전시대의 반통일, 민중탄압법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전면보장하고 경성대 교수에 대한 소환을 즉각 중단하라.
- 김영삼정권은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1994. 8. 10  
민주정치연합(835-1042)

민주정치연합

문서번호 : 94-08-10-4호  
 발신 : 민주정치연합(대표 : 金鐵洙, 40세, 문의/ 대협국장 서동혁 841-1656, 835-1042)  
 수신 : 각 언론사 노동, 사회, 경제, 인권 담당 기자  
 제목 : (주)금호 노조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고문과 인권 유린에 대한 규탄 성명서

담배불 고문 정권의 기만성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우리는 최근의 (주) 금호 노조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고문에 대해서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대표적인 노동조합 중의 하나인 금호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폭력으로 봉쇄하고 노조원들을 연행한 경찰과 현 정권은 노동자의 인권 마저도 유린하고 있다.
2.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금호 노동조합은 7월 29일까지 총 26명의 조합원이 불법 강제 연행되어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명목으로 구속되어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문민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인권유린 사태, 특히 구시대 군사독재의 잔재인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3. 7월 15일에 연행되었던 이석행, 설동은, 두 조합원은 가족의 면회 결과 얼굴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다고 보고되었으며, 7월 21일 전남대 앞에서 연행된 모함중, 김옥현, 김영만 조합원의 경우에는 여관에 감금되어 갖은 폭행을 당하고,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 22일 새벽에는 다시 동부경찰서 근처 여관에 불법 감금되어 심한 구타와 어깨 주위에 담배불로 지지고, 송곳으로 찌르는 반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폭행을 받았다. 또한 김옥현 씨는 23일 새벽 2시 30분 경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웨밀리 랜드로 끌고 가 회칼로 위협하는 등 문민정부라는 허울에 부합되지 않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연행 이후에도 하루 1끼 만을 제공하면서 불법적인 수사를 계속했으며, 25일 새벽 1시 30분 집에서 연행된 유상렬 씨는 영장 제시도 없는 상태에서 강제 납치되어 계립동 소재 모 여관에 감금되어 무릎사이에 붕을 들린 상태에서 허벅지를 차이고 끌어안은 상태에서 머리를 땅 바닥에 박게 하는 등 과거 군사정권에서 악명 높았던 고문을 계속했다. 또한 26일 밤 9시 20분 경에는 노조 부위원장인 정광채 씨는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과거의 괴한 테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우리 민주정치연합은 소위 문민정권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고문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관련자의 처벌을 주장한다. 이번 사건은 현정권하에서 확인된 최초의 고문사건이지만 결코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최근까지도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발표하고 있듯 문민정부 하에도 인권탄압은 계속되고 있다는 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우리 민주정치연합은 인권과 민주주의, 정의를 사랑하는 노동자, 민중과 국제사면위원회를 비롯한 국제 인권 단체



들과 함께 이땅의 고문과 인권유린이 끝장 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내무부 장관의 해임과 관련 경찰관을 사법처리하고, 재발방지 조치와 아울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 금세기 최대의 인권 탄압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 하여 전면적인 사상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 관계법을 개정하여 노조의 정치권을 인정하라.
- 김영삼 정권은 북한 인권 거론하기 전에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고, 구속수배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끝.



# 金根祖씨는 「세번 죽음」 당했다

日字: 1987. 1. 21

所載: 2 版

分類: 社會

「그림 그대」가 4년만에 다시 출간되었다. 이 책은 1983년 12월 10일 서울에서 출판된 이래 4년만에 다시 출간되었다. 이 책은 1983년 12월 10일 서울에서 출판된 이래 4년만에 다시 출간되었다.

## 拷問의 한 번 手術의 한 번 剖檢의 한 번

## 死亡진단서도 없이 장례치류 損賠 청구소송에 주의 할 만하다

이 법원은 1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열린 1986년 12월 10일 서울에서 출판된 이래 4년만에 다시 출간되었다. 이 책은 1983년 12월 10일 서울에서 출판된 이래 4년만에 다시 출간되었다.



金根祖씨의 고문추문사건에 관하여  
金根祖씨

「그림 그대」가 4년만에 다시 출간되었다. 이 책은 1983년 12월 10일 서울에서 출판된 이래 4년만에 다시 출간되었다. 이 책은 1983년 12월 10일 서울에서 출판된 이래 4년만에 다시 출간되었다.

이 법원은 1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열린 1986년 12월 10일 서울에서 출판된 이래 4년만에 다시 출간되었다. 이 책은 1983년 12월 10일 서울에서 출판된 이래 4년만에 다시 출간되었다.

이 법원은 1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부에서 열린 1986년 12월 10일 서울에서 출판된 이래 4년만에 다시 출간되었다. 이 책은 1983년 12월 10일 서울에서 출판된 이래 4년만에 다시 출간되었다.



# 「暴行수사」철저히 규명 관계관리責 추궁키로

民 韓

501 1987. 3. 28

**內務部의 연구**  
 內務部의 연구는 暴行수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하여 關係관리의 責任을 추궁키로 하였다. 暴行수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하여 關係관리의 責任을 추궁키로 하였다. 暴行수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하여 關係관리의 責任을 추궁키로 하였다.

## 각각再調査의 후폭력 韓國정민

暴行수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하여 關係관리의 責任을 추궁키로 하였다. 暴行수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하여 關係관리의 責任을 추궁키로 하였다. 暴行수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하여 關係관리의 責任을 추궁키로 하였다.

暴行수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하여 關係관리의 責任을 추궁키로 하였다. 暴行수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하여 關係관리의 責任을 추궁키로 하였다. 暴行수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하여 關係관리의 責任을 추궁키로 하였다.

# “韓一합심 金理事 폭행 때 두警官이 가세했다”

民韓조사반 발표

暴行수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하여 關係관리의 責任을 추궁키로 하였다. 暴行수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하여 關係관리의 責任을 추궁키로 하였다. 暴行수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하여 關係관리의 責任을 추궁키로 하였다.

暴行수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하여 關係관리의 責任을 추궁키로 하였다. 暴行수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하여 關係관리의 責任을 추궁키로 하였다. 暴行수사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하여 關係관리의 責任을 추궁키로 하였다.















상액과 까다로운 시급요건  
 구실을 못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력범죄  
 처를 입고 구조를 신청해 보  
 상 받은 사람은 제도 시행 첫해  
 88년 7건, 89년 61건, 90년  
 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91·92년에는 각각 79건과 61  
 건으로 신청자가 줄고 있다. 특히  
 1년에 구조를 신청한 5백47명  
 에 보상을 받은 사람은 3백35  
 불과해 전체 신청자 중 61%

천4백만원, 92년 3억6천5백만원으  
 로 1인당 평균 4백70만원이 지급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에 보상금으로 지출  
 된 15억7천7백만원의 전체 예산액  
 22억5천6백만원의 70% 수준에 그  
 치고 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신청 및  
 보상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데다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를 입고 △기에서부터, △기  
 거나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렵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상액수  
 도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1천만  
 원, 장해를 입었을 경우 장해 정도  
 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각각 6백  
 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어, 근로로 얻는 통상

인의 무기 소지가 금지돼 있는 등  
 자위수단이 없는 데다 범죄 예방  
 책임이 국가에 있는 상태에서 살  
 상 등 중대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  
 였을 경우 그 책임의 일부를 국가  
 가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이 제도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요  
 건과 홍보 부족으로 제 구실을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라고 지적했다. 양승우 기자

94. 10. 2  
**가족회 면회 금지**  
**양심수 차단 부당**

지난 9월9일 오후 천주교 인권  
 위원회에서는 사무국장 오창래씨  
 등이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강  
 희철(일본 관련 간첩사건·무기수)  
 씨를 면회하려 했으나 가족이 아  
 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김씨는 인권위원회의 '조작간  
 접 진상규명' 조사결과, 간첩으로  
 조작당해 억울한 목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심을 준  
 비중이다. 더구나 김씨는 국내에  
 가족이 없어 그동안 천주교 인권  
 위원회에서 면회를 다니고 후원  
 도 해왔으나 교도소측에서 갑자  
 기 면회를 금지시켜 재심 절차를  
 밟는 데 차질을 빚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20일에는  
 본 인권위원회 위원장 최명보 변  
 호사와 김태형 변호사 등이 제주  
 교도소에 수감중인 남진현(사노  
 맹사건·13년)씨 면회를 갔다가  
 같은 이유로 면회를 거부당했으  
 며, 지난달 28일에는 진주교도소  
 의 신귀영(일본 관련 간첩사건·1  
 5년)씨 역시 면회를 거부당했다.

교도소 관계자에 따르면 "양심  
 수들의 경우 가족 이외의 사람들  
 에게 면회를 허가하게 되면 교정  
 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  
 러 면회를 금지하라"는 법무부의  
 지침이 전국의 각 교도소에 하달  
 됐다는 것이다.

"연고지도 없이 어렵게 목살이  
 풀 하고 있는 양심수에 대해 구  
 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종교단체  
 의 민회까지 차단된 행위는 군사  
 정권이던 과거 6공에서조차 없었

던 일이다. 우리는 법무부가 집권  
 제한 조치를 시정하고 양심수 면  
 회를 즉각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서울 중  
 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3층

94. 10. 2  
**이경현씨 배상청구 기각**  
**법원 "경찰과실 단정못해"**

교내시위중 진압경찰에게 쫓기  
 다 뇌를 심하게 다쳐 국교생 수준  
 이 지신위력에 머물고 있는 전 부  
 산교대생 이경현(26·여)씨와 가족  
 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  
 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임  
 승숙 부장판사)는 1일 이씨와 가  
 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4  
 천만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선  
 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범  
 어져 다쳤다는 사실 말고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는 상태  
 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  
 혔다.

부산/이수윤 기자

**미, 한국 보안법남용 비판**

94. 10. 2  
**내년 인권보고서 비판 경고**

[워싱턴=연합] 미국의 <워싱턴포  
 스트>는 1일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  
 서 국가보안법에 관한 미국정부의  
 비판과 한국측의 반론 등을 상세  
 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서울발 1면 기사에  
 서 "미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 조문  
 파동 당시의 단속이 바람직하  
 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  
 히하고 있다"면서 "한국정부는 내  
 년도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비판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김일성 조문파문 당  
 시 외국 텔레비전에 "북한은 조용  
 한 장례식을 치르는 반면 한국에  
 서는 진압경찰과 학생들이 대결하  
 는 장면이 비쳐짐으로써" 한국의  
 대외이미지가 손상됐음을 일부 한  
 국 관리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  
 했다.

북·미 외교관계 개설킨 촉구  
 뉴욕타임스 북핵동결 대안

[뉴욕=연합] 미국의 <뉴욕타임  
 스>는 1일 사설에서 미국과 북한  
 위 고위급 회담이 일시 정지된 것  
 과 관련해 양측은 외교협상이 개  
 질 수 있는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  
 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북한을 안  
 심시키는 첫단이 핵개발을 중단시  
 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  
 장했다. 이 신문은 그 조치로 △북  
 한과의 외교관계 개설킨 △경수로  
 지원 등을 제시했다.

**법청학련 사무국장**

94. 10. 2  
**단군릉 준공식 참석위해**

조국통일 범민족청년학생연합  
 (법청학련) 공동사무국장인 최정  
 남(26·서울대. 원예4 휴학)씨가 남  
 쪽 대표 자격으로 북한 단군릉 준  
 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후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  
 한 방송들이 보도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이날 비행  
 장에서는 법청학련 북쪽본부 의장  
 허창조 등 관련 간부들과 청년학  
 생들이 최씨를 맞았으며, 최씨는  
 인사말을 통해 자신은 서울대 원  
 예4에 재학중인 법청학련 공동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고 소개했  
 고 북한 방송들이 보도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한국대학생



# 마산교도소 폭행사건 잦다

## 만기출소자등 폭로 증상입어도 치료외면 실명위기

[마산=이공순 기자] 경남 마산 교도소에서 교도관과 재소자의 폭행사건이 잇따르고 이에 따라 증상을 입은 재소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런 사실은 주민등록증 등 번조 혐의로 지난달 13일 마산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홍장희(27·경기도 부천시 춘의동)씨와 재소자 가족인 이갈기(29·여·경북 구미시 송정동)씨 등이 14일 폭로함에 따라 밝혀졌다.

홍씨에 따르면 마산교도소에 폭력 및 절도 혐의로 수감됐던 장덕수(20·경남 진해시 여좌3동)씨가 지난해 11월 증손씨 면회는 가족들과 웃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면회가 끝난 뒤 교도관 1명으로부터 키스를 맞아 전처 3개월의 증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교도소쪽은 당시 증상한 장씨에게 대해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자 장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같은달 30일 동마산병원으로 옮겼으나 계속 상태가 좋지 않자 지난해

12월1일 형집행정지로 풀여주었다는 것이다. 또 홍씨 자신도 지난해 12월17일 오전 9시10분경 보안과 사무실 앞에서 교도관들로부터 장씨 사건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당했으나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달기씨에 따르면 득력 등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고 마산교도소에 복역중인 오빠 재규(33)씨가 지난해 11월25일 동료 재소자 2명과 웃놀이를 하다 시력 끝에 집단폭행을 당해 눈을 크게 다쳤으나 말썽을 우려한 교도소쪽이 응급치료를 의면회 오른쪽눈이 실명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재규씨 가족들은 교도소쪽이 이 사건을 연락조차 해주지 않아 지난달 초에야 출소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가족들이 사건 발생 40일 만에 면회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뒤 항의하자 뒤늦게 지난달 11일 이씨를 마산 교도병원으로

후송조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는 출혈이 많았던데다 피가 응고돼 정상시력이건 오른쪽 눈이 시력 0.04까지 떨어지는 등 실명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이 교도소 의무과 직원 안아무개(34)씨가 소내로 담배를 반입해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말 사직한 것을 비롯해 지난달 초에는 보안과 직원 김아무개씨가 미결수에게 가석방을 미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사직하는 등 마산교도소 안에서 각종 비리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마산교도소쪽은 "일부 교도관이 담배 반입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은 있으나 재소자 폭행이나 치료 외면은 없었다"며 "장씨의 경우 지병인 위장성 출혈로 쓰러졌고 이씨를 폭행한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 청송감호소 잇단 가혹행위

## 외진요청에 독방감금 구타 담배암거래 조사하며 폭행

### 재소자 가족들 주장

[청송 = 안영수 기자] 경북 청송 2읍면사무소 관내 산3-2 청송보호감호소의 일부 교도관이 재소자들을 가혹행위를 했다는 재소자 가족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일 청송2보호감호소(소장 여남환)의 수감중인 재소자 서재만(31)의 가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서씨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당해 등을 다친 뒤 외부진료

를 요구했으나 최아무개 교감(7급)가 "당사자간에 화해하고 넘어갈 일을 동연히 문제삼아 담당 교도관을 괴롭힌다"며 외진요청 철회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박 교위는 서씨가 거둬 의진을 요구하자 온몸을 포승으로 묶어 13일 동안 독방에 가두고 빗자루막대르 발바닥을 수십차례 때렸다는 것이다.

또 재소자 박동만(28)씨 가족은 지난해 3월 박씨가 담배암거래 혐의로 브안과에 끌려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최아무개 교감(6급) 등

3명의 교도관에게 2시간 남짓 발바닥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해 지금까지 상처가 일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소자 가족들은 "그동안 면회를 자주 하지 못하는데 폭로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해 교도관의 폭행사실을 극도로 밝히게 됐다"며 "감호소는 다른 교도소보다 소내 문제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는 점 때문에 구타행위가 잦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호소측은 "이곳 재소자들은 모두 재범의 우려가 높아 사회보호법에 따라 7년씩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관리과정에서 더러 가벼운 물리력이 불가피하게 동원되기도 하나 서씨 등의 주장은 과장되었다 전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 감호소는 지난해 8월 김아무개 교사(8급) 등 교도관 2명이 특정 재소자에게 시가의 손실배를 받고 담배를 팔아오다 감시반에 적발돼 대구지방교정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당한다" 등 말썽을 빚어왔다.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간첩으로 몰려 자유를 빼앗긴 채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합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국민의 저항이 거세어질 때마다 관심을 돌리기 위해 조작된 간첩들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발족한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남승택 (39·천주교 제주교구) 신부는 4년 전부터 조작간첩사건에 대하여 여러차례 국내외 조사활동을 벌이는 등 실질적으로 이 단체를 만드는 데 큰 일을 했다.

○어쩔수 없이 허위자백

‘간첩’에 관한 일이라면 여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니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그가 이 일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지난 90년 2월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성당의 신부로 발령을 받으면서이다. 대구의 한 사제한테서 억울하게 간첩누명을 뒤집 화면계속(Y/N)?

어쓰고 갇혀 있는 고산 출신 주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특히 간첩사건으로 수감된 사람의 상당수가 몇년 동안 꾸준히 “고문에 못이겨 간첩으로 조작됐다”고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어 사제로서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제주지역에서만 조작간첩사건을 알리기에는 지역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국의 사제와 뜻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수감된 사람들의 처지를 알리고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대책위 결성에 적극 참여했다.

대책위는 천주교 인권위가 일본 천주교 정의평화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일본 관련 간첩사건 20여건을 조사한 결과 4건은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네가지의 사례는 이장형 (62)·강희철 (36)·손유형 (66)·신귀영 (58) 씨 사건 등이다

부산 출신인 신씨를 빼면 세명이 모두 제주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가운데 제일동포인 손씨의 경우는 일본 인권단체 등의 꾸준한 활동으로 사형에서 무기로, 무기에서 20년으로 형기가 줄어들었다.

[0244] 조작간첩 대책위 집행위원장 남승택 신부 (화요일에 만난 사람)  
한겨레신문 94.11.15 18면 ( ) 기획·연재 3,112자 사

◎ “일본간첩사건 일부 조작가능성 크다”



그래서 남 신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 진상규명 운동을 벌이는 계기를 마련해준 이장형·강희철씨 등 2명으로, 두사람 모두 무기형을 선고받고 각각 안동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 복역중이다. 이씨가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요원들에게 연행된 것은 84년 6월 15일이다. 이씨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67일 동안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에게 모진 고문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조총련계인 속화면계속(Y/N)?

부의 지령을 받아 73년부터 82년까지 각종 군사기밀을 탐지해 보고하고, 82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북한을 방문하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고 '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현재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10년째 복역중이다.

천주교 신자이기도 한 이씨는 수감중 남 신부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발가벗긴 채로 칠성판에 묶여 고문을 받는 등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으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면서 "아내와 딸을 똑같은 방법으로 고문하겠다는 위협 때문에 허위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당시의 고문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남 신부는 이씨를 면회하는 한편, 일본 현지 조사활동을 통해 조작간첩사건 피해자임을 확신하고 지난해 6월에는 '이장형씨 석방을

위

한 후원모임'을 꾸려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탄원서를 내고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

○조사 방해세력 있어

86년 간첩 혐의로 구속돼 8년째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강씨의 경우는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증인으로 서겠다는 사람까지 확보하고 있다.

장

64년 제주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 부모와 동생이 있는 일본으로 밀항해 오사카에서 조총련계 조선고급학교(고교과정)를 졸업하고 공

에서 일하던 강씨는 81년 밀입국자로 일본 경찰에 붙잡혀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화면계속(Y/N)?

그는 강제송환되자마자 조총련계 학교를 다녔다는 이유로 당시 부산 보안부대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기도 했으나 혐의가 없어 풀려난 뒤 고향에 들어와 결혼하고 호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평화롭게 살았다. 그러다가 86년 4월 느닷없이 제주도경 대공분실로 연행돼 85일 동안 불법 감금된 채 모진 고문을 받은 뒤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이다.

그가 받은 혐의 내용은 일본의 학교 동창인 재일동포 전아무개씨에게 포섭돼 밀입북하여 간첩교육을 받고 돌아온 뒤 일본에서 강제출국당한 것처럼 꾸미고 국내에서 국가기밀을 탐지해 전씨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강씨의 간첩활동 내용은 증문단지 건설, 방송국 위치, 제주도 내 관공서·교육기관의 위치, 도민 생활상 등을 알렸다는 것으로 증거품은 선물로 받은 만년필·옷가지 등 뿐이며, 흔한 난수표나 단파 라디오 따위도 발견되지 않았다.

남 신부는 "일본 현지조사에서 이들의 재판이 이뤄질 경우 기꺼이 국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증언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확보했다"면서 "이 정도가 간첩 활동이라면 국제적인 관광지를 지향하는 제주도에서 어느 누가 관광안내를 하려 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변론권 없는 형식재판

그래서 그는 이들이 "변론권 박탈 등 형식적 재판과 불법감금, 고문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간첩"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일반 양심수와는 달리 '간첩'이라는 말 때문에 아무리 조

화면계속(Y/N)?

작혐의가 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선선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가 활동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이다. 특히 이들을 위한 조사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변호사 접견을 막는가 하면, 영치금도 못 받게 하는 등 아직도 방해세력이 있는 것을 절감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결과를 계속적으로 알리면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

대책위는 앞으로 이들의 석방과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에서 추가조사를 벌여 재심청구를 하고 특례법 제정운동 등의 활동과 서명운동 등



을 전개하는 한편, 유엔 인권위 실태보고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88년 사제서품을 받은 그는 조작간첩사건 관련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늘어날수록 그들이 밝은 빛을 볼 날도 멀지 않아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10년 넘게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이들의 고통을 지금까지 모른 채 지낸 것은 우리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자유를 구속당한 채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제주=허호준 기자>



【0013】 국제화시대 한국 인권의 현주소 / 문국주 (더불어 생각하며)  
한겨레신문 94.01.15 10면 ( ) 칼럼 · 논단 1,692자

C

어제 우리는 고문에 의해 목숨을 잃은 고 박종철씨의 일곱번째 기일을 맞았다.

매년 그의 기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은폐된 고문사실을 추적한 양심세력의 노력이 마침내 87년 6월항쟁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의 인권상황은 당시와 비교해 개선됐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박종철군 일곱번째 기일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한해 동안의 몇가지 사례를 들어 인권상황은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평가하게 되고 또한 고무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짚어보아야 할 점은 평가의 기준이다.

국민의 인권의식 고양과 함께 공권력의 의식변화가 어느 정도 진척됐는가 평가기준임에 틀림없다. “국가목표를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유보될 수도 있다”는 인식구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먼저 고려하는 차원에서 공권력은 행사돼야 한다”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전체

화면계속(Y/N)?

에서 오늘 인권상황과 관련한 질문은 이렇게 던져질 수 있다. “고문으로 어린 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고문으로 죽어간 아들을 화장해 그 재를 강물에 뿌리도록 강압한 경찰당국이 과연 그 가족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구시대적인 고문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양심

수는 물론이고 일반범죄 혐의자에게까지도 고문 및 가혹행위가 근절됐다 고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고문으로 살인누명을 인정해야만 했고, 진범이 불잡힘으로써 풀려날 수 있었던 어느 경관의 뼈아픈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너무 착잡하게 만든다.

고문은 형벌과는 달리 수사 혐의만을 가지고 가혹행위를 가하는, 그럼으로써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인간성까지 말살하는 반문명적 행위다.

○고문후유증 피해보상 마땅

부터 아직도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법과 심판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

고, 이런저런 이유로 고문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인권과 관련한 인식과 제도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만 피부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진정한 문민정부가 이뤄지고 진정한 신한국이 건설되려면 또 이뤄져야 할 일이 있다. 구 정권 아래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면 마땅히 보상해 주어야 한다. 현재까지도 고문 후유증에 시달려 정신병원에 입원해야만 하는 문국진씨의 이야기가 우리를 울리고 있다.

최근 서울대학교 구내에 민주화운동 기념조형물을 세우기 위해 과거 화면계속(Y/N)?

정권에 희생된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풀어야 할 우리 사회의 숙제를 발견했다. 의문사는 말 그대로 의문사로 남아 있고 그 희생자는 여전히 억울한 희생자로 잠들어 있다.

○무한정쟁 인간성 말살 위험

의문사와 그 희생자들이 여전히 엄존하는 최근 ‘국제화’ ‘개방화’ 따위의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과거의 정치·군사적 대결을 대체해가고 있는 새로운 경제전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국가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이런 주장의 핵심배경이다.

그러나 ‘국제화’ ‘무한정쟁’이라는 구호의 한 구석에는 어떤 칼날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가간 경쟁만이 강조되고 이를 바탕으로 무한정쟁시대에 걸맞은 능력과 심성이 권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들으면서 일말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사회개발이 인간성의 증진

에 기여해야 한다는 너무나 상식적 명제가 간과돼 결과적으로 ‘인간화된 사회’가 아닌 ‘인간성이 말살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간 (10월 10일 오후 6시) 에는 장승포에 있었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했다.

원피고인은 특히 『경찰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관들이 팔을 등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고 입에 수건을 물린채 「원산폭격」 을 시키는가 하면 경찰봉을 장판지에 끼워 꿰어 얹히고 마구 짓밟아 아직도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다』고 증언했다.

또 옥피고인도 『경찰서에 연행돼 오자마자 경찰관 4명이 다짜고짜 방망이 (경찰봉) 로 머리·등등을 마구 때려 무조건 「예」 라고만 대답하니까 때리지 않았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화면계속(Y/N)?

【0249】 “고문에 유괴·살해 거짓자백” / 피고 3명 법정폭로 파문  
 중앙일보 94.11.22 21면 (사회) 뉴스 768자

◎강주영양 사건... 부산변호사회 진상조사  
 화면계속(Y/N)?

【부산=정용백기자】 지난달 10일 부산에서 발생한 강주영 (8·만석·국교 3) 양 유괴·살해사건은 처음부터 경찰의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 (중앙일보 9일자 23면 보도) 으로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부산지방법변호사회가 21일 이 사건과 관련, 인권위원회를 소집해 경찰의 가혹행위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 (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후 2시 부산고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구속기소된 4명의 피고인중 경찰이 주·공범으로 지목한 원종성 (23) ·옥영민 (26) ·남모 (19·여) 피고인 3명은 검찰·변호인측의 신문에서 『경찰의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했다』고 진술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원피고인은 『공범 이·남모양과는 지난 5월이후 만난적도 없고 범행을 모의한 시간 (10월9일 오후 4시 30분 쯤) 에는 대구에 있는 애인 이재욱 (23) 양과 함께 있었으며 범행시



<6>

# 유괴사건 피고인 고문 확인

## 부산지법 실시한 신체검증서 피멍등 상흔 발견

### 고문경찰관 수사 불가피

부산 만덕국고 강주영(8)양 유괴살해사건의 피고인 2명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해 생긴 상처의 흔적이 법원에 의해 공식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고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이 사건의 재판과 관계없이 고문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판사실에서 수사를 담당한 부산 북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추정한 원종성(23), 옥영민(25)씨 등 2명에 대한 신체검증을 실시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연행된 뒤 40일 만인 이날 실시된 신체검증에서 원씨에게서는 양쪽 손목에 수갑에 눌러 생긴 멍 자국, 왼쪽 무릎 안쪽에 바닥에 비벼져 생긴 상처가 아물어 나타난 흉터가 발견되고 왼쪽발 두번째 발가락의 발톱 밑에 피멍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옥씨는 왼쪽 허벅지 중간쯤에 멍이 들었다가 아문 흔적과 왼쪽 손목에 수갑에 눌러 생긴 멍 자국, 왼쪽 귀 윗부분과 머리 사이에 자를 넣어 마찰시킨 흔적 등이 발견

됐다.

원씨는 이날 신체검증에서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린 뒤 양팔을 등뒤로 해 수갑을 채우고 복숭아뼈가 바닥에 닿도록 꿰어얹혀 놓고는 몽둥이로 허벅지를 구타하고 발로 온몸을 밟았으며 수갑이 채워진 손을 아래 위로 움직여 피가 안 통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옥씨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꿰어얹혀 놓고 허벅지를 몽둥이로 구타하고 온몸을 구두발로 찼으며 왼쪽 귀 윗부분과 머리 사이에 플라스틱 자를 끼워 앞뒤로 움직여 마찰시켜 고통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옥씨는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에 피와 구두 발자국이 묻어 있자 현장검증 때는 운동복으로 갈아입혔으며 청바지는 경찰관이 가져간 뒤 사라졌다"고 밝혔다.

원씨와 옥씨는 "40일 전인 지난 달 13일 새벽에 처음 연행됐을 때 가장 심하게 고문을 당했으며 지난 달 18일 가족들이 면회를 왔을 때 경찰관 5~6명이 '영종한 소리를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해 고문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이수윤 기자



이것이 고문 상처

강주영양 유괴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옥영민씨가 23일 오후 부산지법 박태범 부장판사실에서 고문 흔적 부위를 담당 판사와 변호사, 보도진에게 보이고 있다. 부산/연합



제 목 : [부산] 부산지검, 조작논란 피고에게 사형등 극형 구형

범인 조작 논란을 벌여온 부산 국교생 강주영(8)양 유괴살해사건의 피고인 4명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제2형사부 김재경·안춘호 검사는 23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주범 원종성(23) 피고인에게 사형, 남아무개(19) 피고인과 강양의 이종사촌언니인 이아무개(19) 피고인, 옥영민(27) 피고인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원 피고인은 유괴 살해를 주도한 주범으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치밀한 계획 아래 완벽한 알리바이 조작을 시도하고 공판과정에서도 뉘우치기는커녕 고문에 의해 범인으로 조작됐다는 거짓 주장을 계속해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며 나머지 3명은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근수 변호사 등 변호인단 3명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예단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술한 증언과 증거는 배척하고 고문과 번복진술 강요 등을 통해 무고한 피고인 3명을 범인으로 만든 대표적인 조작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 사회에 진실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마땅히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원씨 등 무죄를 주장해온 피고인 3명은 최후진술에서 “자다가 날벼락을 맞았다고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겪은 고통이 너무나 커 다시는 우리와 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대구문화방송 조숙희 아나운서는 “지난 10월 9일 낮 12시께 조카의 유치원 운동회가 열린 대구 신성국교에 도착해 언니 식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은 뒤 오후 1시30분~2시 사이에 증거로 제출된 사진을 찍는 것을 목격했으며 당시 ‘엑스트라로 나오겠네’ 라는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증거로 제출된 사진은 조작됐으며 원 피고인은 오전 10시께 대구를 출발해 거제에서 옥 피고인을 태우고 오후 4시 부산의 유괴 모의 장소로 왔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돼 원·옥 피고인의 범행 모의일 핵심 알리바이가 입증됐다. 부산/이수윤 기자



# 자백 의존 '예단수사' 뒷에 걸린 검·경

□ 재수사 여론 부산국교생 유괴 살해사건

## 피해자 사촌언니 진술과신 고문등 밀어붙이기 수사...공소유지 불투명

부산/이수윤 기자

부산 만덕국교생 유괴살해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은 결과적으로 예단을 가지고 피의자의 자백에만 매달린 나머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설한 증거와 수많은 증인의 뒷에 걸려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피의자 자백 과신=수사기록과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의 조사종합보고서, 재판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검·경은 숨진 강주영양의 이종사촌언니인 이아무개(19·여)양의 거짓진술을 맹신하는 바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셈이다. 이에 따라 무고한 3명을 법정까지 세워 공판력의 위신을 땅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엄청난 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을 것

으로 변호인단 등은 내다보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경찰이 처음 연행한 이양이 공범으로 여고 동창생인 남아무개(19·동주여전 비서1)양과 원종성(23)씨, '김철민' 등 3명이라고 지목한 자백을 과신해 신중한 검증 없이 받아들인 데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철민'이 해운대경찰서 의경으로 사건 당일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씨 자백의 진위를 의심해보지 않고 원씨에게 자백을 강요해 옥영민(27)씨가 김씨라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이 과정에서 원씨와 옥씨를 무자비하게 고문했다는 것이 목격자 진술과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 불리한 증언 외면=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은 또 3명의 무죄를 입

증하기 위해 사건 초기에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찾아간 증인들의 얘기는 들어 보려 하지도 않고 내쫓았으며 일부 핵심 증인은 한밤중에 다시 불러 강압수사를 통해 반복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괴살해라는 사건의 성격상 주변 인물들이 경찰이 조사를 위해 소환해도 나오기를 꺼려하는 증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유괴살인범마저 감싸고 도는 가족·집단이기주의 또는 알리바이 조작의 공범이라고 매도해 왔다. 검·경은 도리어 남양의 친구 이상희(19)양을 대리시험을 쳐줬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이양 등을 처음 만난 취재기자마저 알리바이 조작을 지시했다며 위계에 의

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하는 등 무리한 행보를 계속해왔다.

◇ 이양 재수사 시급=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3명을 끌어 들인 이양을 재수사하는 것이 진실을 밝히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양은 지난 9일 열린 9차 공판의 변호사 반대신문 때 살해장소와 그곳을 찾아가던 경로 공범들과의 연락방법 등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했으며 원씨와 지난해 6월 이후 연락이 끊어졌는데도 자신이 8월에 구입한 무선호출기로 원씨에게서 연락이 와 만나게 됐다는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해 사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줬다.

이양의 친구들은 "이양이 화가 나 유리컵을 입으로 깨뜨는 것을 목격

했으며 왜소한 체구와 용모에 대한 열등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어려운 가정형편 등 때문에 지난해 여름 자살 방법을 묻기도 했다"고 밝혔다.

수사기록과 친구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양은 처음 만날 때부터 원씨에 대해 호감을 가졌으나 원씨가 남양에게만 관심을 보였으며 의경 김씨도 자신의 짝이었으나 자신 몰래 남양을 만난 사실을 알고 무척 화를 낸 적이 있는 등 원씨와 남양, 김씨 3명은 이양의 질시 대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은 친구들도 집단사정을 모르는 폐쇄적 성격의 이양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강양을 살해할 만한 이유를 밝혀내야 결국 그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아직도 꿈틀대는 고문의 망령 <sup>4/5 (3)</sup>

재판부가 피고들의 몸을 살펴보고 고문으로 생긴 상처의 흔적을 공식으로 확인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흔히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 피고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데는 더디기 짝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법부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이 우선 깊은 인상을 준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23일, 한 국민학교 여학생을 유괴해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의 몸을 정밀하게 검증한 결과 부산 북부서 경찰관들이 그들을 고문해서 생긴 것으로 판단되는 상처를 여러 군데 확인했다. 손목을 수갑으로 누르고, 무릎을 바닥에 비벼대고, 귀 윗부분과 머리 사이에 자를 넣어 마찰시킴으로써 그런 상처들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지난달 10일에 일어난 그 유괴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이 두 20대 청년을 구속하고 난 직후부터 그들이 진범이 아니라는 주장이 끈질기게 나왔다. 한 청년에 대해서는 알리바이와 무죄를 증언하는 사람이 무려 29명이나 나타났고,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증언을 했다. 특히 원아무개씨는 그의 아버지가 한 지방의회 부의장으로 상당한 자산가인데도 경찰은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을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혐의자인 옥아무개씨는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운문을 구타당한 흔적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경찰의 수사가 조작과 고문의 의혹에 휩싸여 있었던 데도 검찰은 "알리바이를 증언하는 사람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기소했다.

이승만 정권의 특무대와 헌병대,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하여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의 정보·수사기관으로 이어지면서 저질러진 고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중에서도 '남영동'이라고 부르는 경찰의 대공분실에서 일어난 서울대생 박종철씨 고문치사는 전두환 정권의 몰락에 불을 댕기는 도화선이 되었다. 같은 정권이 저지른 김근태·권인숙씨에 대한 고문, 노태우 정권 아래서 일어난 정치범에 대한 가혹행위들은 그런 정권과의 차별성을 유난히 강조하는 김영삼 정권에 들어서도 없어져야 할 악폐의 첫손가락에 꼽혀왔다.

그러나 이번에 재판부가 피고들이 당한 고문을 직접 확인해서 공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고문의 망령이 꿈틀대고 있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망령이 아니라 흉두꺼처럼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근자에 폭로된 '남매 간첩' 조작설 같은 것은 아직도 정보·수사기관에서 고문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일으킨다. "고문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는 말이 지금도 절실한 공감을 부르는 이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94. 12. 12 일경게

# 유괴살해사건 범인조작 의혹 증폭불구 1/2 (1P)

## 검찰, 진실규명 회피

부산 만덕국고생 강주영(8)양 유괴살해사건의 범인조작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나 검찰이 진실 규명을 위한 재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이 사건 3차 공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인 4명 가운데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성(23), 남이두개(19·동주여전 비서), 옥영민(26)씨 등 3명의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가 더욱 분명해지고 검찰쪽 증인이 애초의 진술을 반복한데다 경찰의 고문현장을 목격 한 증인마저 나타나 이들의 공범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에도 재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강양을 유인한 혐의로 구속된 사촌언니 이아두개(19)씨의 자백만 믿고 사건 초기에 이씨 주변의 공범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수사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씨에 의해 '주범'으로 지목된 원씨는 사건 전날 오후 1시30분 전후에 대구에 있었던 사실과 이날 오후 4시51분~6시5분 사이에 해운대 하이야트호텔 키피숍에 머문 것이 호텔 매출전표 등을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

거재로 가 '공범' 옥씨를 태우고 부산에 와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중구 남포동 파클로커피숍에서 사건모의를 했다는 김경의 주장이 뒤집혔다.

기소 직전 들은 진술을 반복해 김경이 이들 3명에 대해 '공범'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해준 남씨도 모의시간에 삼천포에 다녀오고 사건 당일 학교에서 시험을 치거나 남지친구를 만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옥씨도 사건 전후에 부산에 온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당초 범행 차량인 프라이트승용차에서 채취한 머리카락 32점에 기대를 걸었으나 기소 후인 지난달 15일 대검 유전자감식실로부터 송진 김양의 것은 물론 '범인' 4명의 것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협박과 부진호출 때 사용한 전화를 찾아내기 위한 공중전화 등 70여대의 발신지 조회에서도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등 현재 자백만 있고 물증은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전화통화는 조회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으며, 원씨의 옥씨가 경찰 조사 때 고문을 당하

는 모습과 상처를 목격한 증인도 3명이나 나타나 공증절차까지 마쳐놓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경찰이 참고인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해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조서 조차 받아주지 않은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잇달아 드러났다.

그러나 부산지검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씨의 자백에 대한 신빙성만 입증하면 나머지 3명도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소 이후 드러난 새로운 사실 등에 대한 보강수사마저 회피하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 진상조사소위원장인 문재인 변호사는 "범인이 조작했다는 물증들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검찰은 재판에 매달려 본질을 흐리기보다는 진실 규명을 위해 재수사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은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법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매주 월요일 특별기일을 잡아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해 12일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부산/이수윤 기자







【0021】 “고문에 유괴·살해 거짓자백” / 피고 3명 법정폭로 파문  
중앙일보 94.11.22 21면 (사회) 뉴스 768자

◎강주영양 사건… 부산변호사회 진상조사

【부산=정용백기자】 지난달 10일 부산에서 발생한 강주영(8·만덕국교3) 양 유괴·살해사건은 처음부터 경찰의 고문에 의해서 조작된 것(중앙일보 9일자 23면 보도)으로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부산지방법변호사회가 21일 이 사건과 관련, 인권위원회를 소집해 경찰의 가혹행위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후2시 부산고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구속기소된 4명의 피고인중 경찰이 주·공범으로 지목한 원종성(23)·육영민(26)·남모(19·여) 피고인 3명은 검찰·변호인측의 신문에서 『경찰의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했다』고 진술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원피고인은 『공범 이·남모양과는 지난 5월이후 만남적도 없고 범행을 모의한 시간(10월9일 오후4시30분쯤)에는 대구에 있는 애인 이재욱(23) 양과 함께 있었으며 범행시간(10월10일 오후6시)에는 장승포에 있었다』며 범행일체를 부인했다.

원피고인은 특히 『경찰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관들이 팔을 등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고 입에 수건을 물린채 「원산폭격」을 시키는가 하면 경찰봉을 장판지에 끼워 꿰어 얹히고 마구 짓밟아 아직도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다』고 증언했다.

또 육피고인도 『경찰서에 연행돼 오자마자 경찰관 4명이 다짜고짜 방망이(경찰봉)로 머리·등등을 마구 때려 무조건 「예」라고만 대답하니까 때리지 않았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0023】 “유괴사건 고문 목격” / 증인 셋 나서  
한겨레신문 94.12.08 23면 (사회) 뉴스 881자

부산 만덕국교생 유괴살해사건을 수사한 북부서 경찰관들이 이 사건의 남자 ‘공범’ 2명에게 고문을 가해 범인으로 조작했음을 입증하는 증인 3명이 나타났다.

이들의 생생한 증언은 담당 재판부의 신체검증 이후 고문사실을 강하게 부인해온 검찰과 경찰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부산지방법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변호사)는 7일 이 사건 관련자 4명과 같은 시간대에 북부서 형사계 강력반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서 6일 동안 함께 지낸 트럭 운전기사 조성제(30) 씨와 유치장에서 고문 상처를 목격한 유아무개(38) 씨, 이아무개(26) 씨 등 3명의 증언을 확보해 공증을 마쳤다. 진상소위가 공개한 공증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0월16일 오전 11시께부터 1시간 가량 이 사건으로 구속된 원종성(23) 씨와 원씨의 선배 육영민(26) 씨가 각각 경찰관 4~5명씩에 둘러싸여 한쪽 팔은 위로 하고 다른 팔은 아래로 해 등뒤에서 수갑이 채



위지고 무릎 아래쪽에 경찰봉이 끼워진 상태에서 주먹과 구둣발로 온몸을 무차별 폭행당하고 무릎을 짓밟히는 고문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다. 경찰관들은 또 원씨와 옥씨의 머리를 바다에 처박게 한 뒤 다리는 제자리에 둔 상태에서 머리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고문을 가하는가 하면 폭행을 당해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들에게 “형사님 잘못했습니다”를 외치며 빠른 속도로 제자리 달리기를 시키기도 했다는 것이다.

조씨와 유씨 등은 “원씨가 유치장 같은 방에서 지내 목과 가슴 허리 허벅지 손목 등에 멍이 든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으며 원씨가 연행돼 온 뒤 이들 동안 한없이 맞아 할 수 없이 무고한 옥씨의 이름을 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부산=이수윤 기자>

**【0024】 어린이유괴 살해범조작 의혹/고문목격자 증언 공중/부산**  
국민일보 94.12.08 17면 (사회) 뉴스 512자

**【부산=전인철기자】** 부산 만덕국교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의 범인조작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북부경찰서경찰관들이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원종성(23)·옥영민(25) 피고인에게 고문을 가해 범인으로 몰았다는 목격자증언이 나왔다.

부산지방법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강양 유괴살해사건 진상조사 소위원회(위원장 문재인변호사)는 8일 다른 사건으로 원피고인 등 4명과 함께 북부경찰서형사계에서 조사를 받고 6일간 유치장에도 같이 수감됐던 조승제씨(31·트럭운전자)와 유치장에서 고문상처를 목격한 유모(36), 이모(26)씨 등 3명의 증언을 확보, 공중을 마쳤다.

진상조사소위원회가 공개한 공중서에 따르면 조씨는 10월16일 오전 11시쯤부터 1시간 정도 원, 옥씨가 각각 형사들에 둘러싸여 양쪽 팔목을 등뒤로 한채 수갑이 채워지고 허벅지에 경찰봉을 끼운 상태에서 무릎을 꿇려 주먹과 구둣발로 온몸을 무차별 폭행당하는 등 고문을 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다.

**【0025】 유괴살해사건 범인조작 의혹 증폭불구/검찰, 진실규명 회피**  
한겨레신문 94.12.12 19면 (사회) 뉴스 1,574자

부산 만덕국교생 강주영(8)양 유괴살해사건의 범인조작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나 검찰이 진실 규명을 위한 재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이 사건 3차 공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인 4명 가운데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원종성(23), 남아무개(19·동주여전 비서1), 옥영민(26)씨 등 3명의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가 더욱 분명해지고 검찰쪽 증인이 애초의 진술을 반복한데다 경찰의 고문현장을 목격한 증인마저 나타나 이들의 공범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에도 재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강양을 유인한 혐의로 구속된 사촌언니 이아무개(15)씨의 자백만 믿고 사건 초기에 이씨 주변의 공범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수사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씨에 의해 '주범'으로 지목된 원씨는 사건 전날 오후 1시 30분 전후에 대구에 있었던 사실과 이날 오후 4시 51분~6시 5분 사이에 해운대 하이아트호텔 커피숍에 머문 것이 호텔 매출전표 등을 통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 거제로 가 '공범' 옥씨를 태우고 부산에 와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중구 남포동 피콜로커피숍에서 사건모의를 했다는 검경의 주장이 뒤집혔다.

기소 직전 돌연 진술을 번복해 검경이 이들 3명에 대해 '공범'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해준 남씨도 모의시간에 삼천포에 다녀오고 사건 당일 학교에서 시험을 치거나 남자친구를 만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옥씨도 사건 전후에 부산에 온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당초 범행 차량인 프라이드승용차에서 채취한 머리카락 32점에 기대를 걸었으나 기소 후인 지난달 15일 대검 유전자감식실로부터 숨진 강양의 것은 물론 '범인' 4명의 것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협박과 무선호출 때 사용한 전화를 찾아내기 위한 공중전화 등 70여대의 발신지 조회에서도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등 현재 자백만 있고 물증은 아무것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전화통화는 조회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으며, 원씨와 옥씨가 경찰 조사 때 고문을 당하는 모습과 상처를 목격한 증인도 3명이나 나타나 공중절차까지 마쳐놓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경찰이 참고인들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해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조서조차 받아주지 않은 사실이 공판과정에서 잇달아 드러났다.

그러나 부산지검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고,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씨의 자백에 대한 신빙성만 입증하면 나머지 3명도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소 이후 드러난 새로운 사실 등에 대한 보강수사마저 회피하고 있다.

부산지방법변호사회 인권위 진상조사소위원장인 문재인 변호사는 "범인 일 조작됐다는 물증들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검찰은 재판에 매달려 본질을 흐리기보다는 진실규명을 위해 재수사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 검찰이 기소한 이 사건은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매주 월요일 특별기일을 잡아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해 12일 4차공판이 예정돼 있다. <부산=이수운 기자>

【0026】 국교생 살해 피고인 고문혐의/형사10여명 고발키로  
조선일보 94.12.22 31면 (사회) 뉴스 407자

#### ◎부산 변호사회 인권위

【부산=박주영기자】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21일 부산 만덕국교 강주영(8)양 유괴살해사건과 관련, 원종성(23) 피고인등 2명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김모경위(40) 등 부산



북부경찰서 강력반 형사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인권위측은 이를 위해 오는 23일 회의를 소집, 경찰관의 가혹행위부분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였던 산하 진상조사소위원회 (위원장 문재인변호사)의 보고를 듣고 고발대상이 될 경찰관 선정등의 절차를 거친 뒤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인권위측은 이와관련, 『이 사건이 재판에 계류중이라 고민을 했지만 피고인들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경찰관의 수사과정상 가혹행위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판단에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0027】 국교생 살해 피의자 고문혐의/경관 10여명 고발키로  
동아일보 94.12.22 30면 (사회) 뉴스 283자

◎부산지방 변호사회

【부산】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국교생 강주영양 (9) 유괴살인사건과 관련, 부산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이 피의자와 참고인등을 고문했다며 23일 인권위원회를 소집, 12~14명의 경찰관들을 부산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진상조사소위 (위원장 문재인변호사)는 부산북부서의 김모경위등이 옥영민씨 (26) 등 이 사건 피의자와 참고인 박모씨 (26) 등 13명에게 구타와 함께 편파수사를 한 사실을 공증등을 통해 확인, 고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0028】 고문경찰관 고발키로/부산변협/국교생유괴사건 관련 14~15명  
한국일보 94.12.22 30면 (사회) 뉴스 1,657자

【부산=박상준기자】 속보=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재인)는 21일 부산만덕국교생 강주영 (8) 양 유괴살인사건을 1개월여간 자체 조사한 결과 부산북부서 경찰관들의 고문혐의가 드러났으며 관련 경찰관 14~1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자체 조사결과 이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4명중 강양의 이종사촌 언니 이모 (19) 양을 제외한 원종성 (23) 피고인등 3명이 경찰의 고문에 못이겨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변호사회는 이 사건 수사경찰관인 북부경찰서 형사과 김모경위등 14~15명을 가혹행위와 독직혐의로 23일께 부산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다.

【0030】 ‘유괴사건’ 고문경찰관 고발/부산변호사회, 증거 확보  
한겨레신문 94.12.22 23면 (사회) 뉴스 1,079자 틈

◎강력반장 등 10여명 대상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성래)는 부산 국교생 유괴살해사건 수사에 관여한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과 강력반 반원 10명을 비롯한 경찰관 10여명을 22일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1일 문재인, 김상영, 정덕관 변호사 등 3명으로 진상조사소위원회 (위원장 문재인)를 구성해 피고인 4명과 고문 목격자



3명, 사건 참고인 6명에 대해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뤄진 고문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고문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소위의 조사 결과 원종성(23) 씨와 옥영민(26) 씨 등 2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수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심지어 참고인 3명에게도 가혹행위와 진술 번복 강요 등 불공정 수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발 대상자는 당시 강력반 반장이었던 김종두 경위를 비롯해 양아무개, 정아무개 경장 등 강력반원 10명 전원과 당시 형사계에서 지원을 나왔던 경찰관 2~4명 등 모두 12~14명에 이른다고 부산변협 관계자는 밝혔다.

진상조사소위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원씨와 옥씨의 양팔을 등 뒤로 해 수갑을 채운 뒤 무릎을 꿇게 하고 무릎 아래쪽에 경찰봉을 끼워 놓은 상태에서 주먹과 구둣발로 온몸을 무차별 폭행하고 무릎을 짓밟는 등 고문을 했다.

진상조사소위는 특히 '공범'으로 기소된 남씨의 이종사촌동생인 지훈성(16·성지공고2) 군이 경찰에서 "누나와 함께 범행모의일 삼천포에 다녀왔다"고 진술하자 경찰관이 조사실의 불을 끄고 밤 11시 45분부터 새벽 4시까지 조사하면서 머리와 목부분을 폭행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이놈 구속시킬테니 차 대기시켜"라고 한 뒤 "가족 모두를 구속시켜 버린다"는 등 협박을 가해 진술을 번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소위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대응할 방침이었으나 피고인들의 유무죄와는 관계없이 고문경찰관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며 이른바 '문민정부' 아래서도 강력사건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그릇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고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이수운 기자>

【0031】 고문경관 무더기 고발/국교생납치 살해사건 관련/부산 변호사회  
경향신문 94.12.22 22면(사회) 뉴스 345자

【부산】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발생한 부산 만덕국교 강주영양(8)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3명이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 수사를 담당했던 부산 북부경찰서 경찰관 14~15명을 23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변호사회는 특히 이번 사건수사를 지휘한 담당검사 및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이해적으로 대검에 징계조치 등을 촉구할 방침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변호사회 소속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문재인변호사)는 21일 『강양유괴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엄청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재현기자>

【0032】 「국교생 유괴」 수사경관 14명/고문혐의 고발키로/부산변협  
세계일보 94.12.22 25면(사회) 뉴스 322자

【부산=석동빈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1일 부산만덕국교 강주영양(8) 유괴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구타와 가